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가족·문화부문)

변화순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가족·문화부문)

연구책임자 : 변 화 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인 순 (본원 전문연구위원)

정 수 연 (본원 연구위원)

백 혜 정 (청소년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 소 현 (본원 위촉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28-01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8-02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가족·문화부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8-03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미국 가족·청소년부문)	미국 하와이대학교 EWC (East-West Center)
10-28-04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건강부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8-05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노동부문)	한국노동연구원
10-28-06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복지부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력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백혜정 청소년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김소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미국 하와이 대학교 EWC (East-West Center)	최민자 미국하와이대학교 EWC(East-West Center) 교수	박상현 연구조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치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요약

I. 서론

□ 연구 목적

- 제2차 경제위기 속에서의 빈곤가족의 대물림 차단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빈곤가족의 특성을 부부관계성, 부부만족도, 부부갈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문화자본의 세대간 이동 흐름을 중요 분석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여성가족패널 1,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혼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
-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도간의 관계 분석
- 취약계층의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
- 여성가족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실천적 제안 도출

II. 소득계층과 부부관계성 패널 조사분석

□ 분석 결과

-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일자리 특성
 - ‘남편만일자리있음’-‘맞벌이 부부’-‘부부모두일자리없음’-‘여성만일자리 있음’ 순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부부관계 변인의 특성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중산층에 비해 높음
 - 소득이 높을 수록 부부동반활동이 더 잦은 경향성 보임
 - 저소득층일수록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비율 높음
-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최종모형을 통해,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임
 -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부관계성은 낮게 나타남
 - 부부가 모두 일자리가 없는 집단 보다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의 부부관계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적 부담감과 가사노동병행이 부부관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높을수록, 부부동반활동 빈도 잦을수록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임
 - 가정폭력 경험자의 경우 부부관계성이 부정적임
- 결혼만족도 분석 결과
 - 부부의 취업상태별 결혼만족도 수준 분석 결과,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 수준 분석 결과, 고소득층이 가장 높았으며, 저소

특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부부갈등 원인 분석 결과

- 부부의 취업상태별 부부갈등 원인 분석 결과, 부부가 모두 일자리가 없는 집단과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맞벌이 부부 집단은 경제적 문제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반면, 남편만 취업한 집단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 소득계층간 부부갈등원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경제적 문제,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자녀교육 문제가 고르게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분석

○ 가족안전망 관련 정책 현황 정리

구분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
목적 · 목표	가족기능 강화, 사회문제 예방,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	다양한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아동
급여	*프로그램 제공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부양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가족교육 - 가족상담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무료숙박제공(6-24개월) - 신체적·정신적 안정지원 -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예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전달 체계	사회복지관(전국41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139개)	가정폭력상담소(전국278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전국66개)

-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과 가정폭력방지정책은 사후치료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비교적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통합적 차원에서 가족을 설정하고 있음
- 접근성 차원에서는 사회복지관 414개,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278개와 6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139개로 사회복지관의 접근성 차원에서 가장 우수함

III.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 관련 패널 조사분석

□ 분석 결과

- 연도별 소득계층과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진로 준비도간의 관계
 - 소득계층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 분석 결과,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층이나 상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정도가 낮은 반면 가정폭력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거주지역환경의 열악함 정도를 분석한 결과, 빈곤 계층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음
 - 빈곤계층의 청소년의 자립 수준은 낮았고, 특히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이나 자존감, 자기신뢰도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상류 및 중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그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의 어려움 보여줌
 -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의 자립준비에는 빈곤의 영향보다 부모-자녀 관계나 가정폭력 등 가정환경의 열악함과 거주지역 환경의 열악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빈곤의 지속경향과 가정환경,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했거나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부모 감독의 정도는 낮았으며, 가정폭력의 정도는 높음

- 지속적인 빈곤 뿐 아니라 일시적인 빈곤 역시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 및 그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거 빈곤 경험과 현재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

-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빈곤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

- 가정 내 폭력이 감소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자존감, 자기신뢰도, 자기통제력, 진로성숙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안전망 분석 및 개선방안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안전망 관련 정책현황

추진사업	목적	대상	주체	내용
위스타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 공동체 구축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아동	지역사회 중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빈곤아동 대상의 건강지원, 영양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	취약지역 거주하는 0세~12세 이하 아동가구 저소득 임신부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신체/건강관리,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역아동센터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개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	-
아동복지교사 지원	빈곤아동문제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기본 인프라 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에 2,905명 파견	보건복지부	전일형(주간, 주야), 프로그램 지원형 교사분야(10분야)

추진사업	목적	대상	주체	내용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 사교육비 절감	맞벌이 · 한부모 부모 가정 청소년, 초4~중2학년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 흥센터 상시운영	전문체협활동, 재량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청소년공부방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원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원프로그램 제공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통합지원체제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 · 청소년	시도교육지원청지 역교육지원청학교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IV. 요약 및 정책제언

□ 취약계층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정책제언

-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범위 확대 필요
-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확대 필요
 - 이용자 수, 교통, 시설유형 등을 고려해 적정 개소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 · 설치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에도 민간자원과의 연계 활성화
- 가족관계에 있어 위험과 실질적인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예방교육과 더불어 가족활동, 가족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망 등의 다차원적인 욕구조사가 실시되어 프로그램 개발로 연결되어야 함

□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원
 -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학교-지역사회공동체 연계사업이라는 사업출발당시 목적에 충실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사업조정인력인 코디네이터의 위상, 기능, 자격요건, 처우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 규정 필요
 - 이 세대(Two generation) +지역사회 참가모델 구축 위한 코디네이터 요원 배치
 - 조기개입적, 예방적, 종합적 접근을 위한 아동의 부모와 의사소통채널 확보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유사사업 통합 기능·조정 위해 부처별 유사사업을 1개 부처로 통합 운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식 제고
- 지역단위별 “지역아동청소년사업협의체” 혹은 “지역아동청소년 정보센터” 기구 마련
- 세부사업별 코디네이터 인력의 위상정립과 처우 현실화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한계점	6
II. 이론적 배경	9
1. 연구의 개념과 범위	11
가. 경제위기	11
나. 빈곤	12
다. 젠더	13
라. 사회 안전망	14
마. 휴먼뉴딜	15
2. 경제위기와 가구빈곤의 변화	17
가. 도시가구의 빈곤율 추이(1997년~2008년)	17
3. 소득계층과 부부관계	20
가. 소득계층과 기혼취업여성의 부부관계	20
나. 부부의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24
다. 도시빈곤층의 부부폭력과 자녀학대	26
4. 빈곤화 과정과 빈곤의 대물림	32
가.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2
나. 빈곤의 세대간 이전 및 빈곤탈피에 대한 선행연구	34
III. 소득계층과 부부관계성 패널 조사분석	41
1. 조사개요	43

가. 조사대상 데이터	43
나. 주요변수 측정도구와 연구모형	43
2. 조사결과 분석	48
가. 1, 2차 여성가족패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나.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0
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 분석	73
라. 소결	81
3.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분석	83
가.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현황	83
나. 문제점 및 정책제언	94
 IV.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 관련 패널 조사분석	99
1. 조사개요	101
가. 조사대상	102
나.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102
다. 주요변수의 측정 및 실태	102
2. 조사결과	108
가. 연도별 소득계층과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진로 준비도간의 관계	108
나. 빈곤의 지속경향과 가정환경, 청소년의 자립 준비도	119
다. 과거 빈곤 경험과 현재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	121
라. 현재 빈곤층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	123
마. 소결	125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안전망 분석 및 개선방안	128
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128
나. 소결	145

V. 요약 및 정책제언	151
1. 요약	153
가.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과 사회적 안전망	153
나.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156
2. 정책제언	159
가. 취약계층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정책제언	159
나.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160
 ■ 참고문헌	165
 ■ Abstract	173

표 목 차

<표 II-1>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빈곤율: 소득	18
<표 II-2>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빈곤율: 지출	19
<표 III-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46
<표 III-2> 추가분석에 사용된 변수	47
<표 III-3>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연령 분포	48
<표 III-4>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학력 분포	49
<표 III-5> 연도별 월총소득 분포 비교	50
<표 III-6> 연도별 전체 여성의 혼인상태 비교	51
<표 III-7>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연수 분포	51
<표 III-8> 2008년 기준 전체 여성의 혼인상태 변동	52
<표 III-9> 2008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혼인상태 변동	53
<표 III-10> 연도별 부부의 취업 상태 비교	54
<표 III-11> 연도별 소득계층간 부부의 취업형태 차이	55
<표 III-12>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일자리 종류 비교	56
<표 III-13>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직종 범주 비교	57
<표 III-14>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종사상 지위 비교	57
<표 III-15> 소득계층별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차이	58
<표 III-16> 소득계층별 부부동반활동 정도의 차이	59
<표 III-17> 소득계층별 가정폭력 경험 차이	59
<표 III-18> 연도별 부부관계성 분석	61
<표 III-19> 독립변수별 부부관계성 차이 분석	63
<표 III-20> 연도별 부부동반활동 세부항목별 평균 점수 비교	65
<표 III-21>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비교	66
<표 III-22> 가정폭력경험(CTS) 점수 비교	67
<표 III-23> 위계적 회귀분석: 2007년	71

<표 III-24> 위계적 회귀분석: 2008년	72
<표 III-25>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	73
<표 III-26> 연도별 부부의 취업상태별 결혼만족도 비교	74
<표 III-27>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	75
<표 III-28>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갈등의 원인	76
<표 III-29> 2007년 기준 소득계층별 부부갈등 1순위 차이 교차분석	77
<표 III-30> 2007년 기준 연령별 부부갈등 1순위 차이 비교	78
<표 III-31> 2007년 기준 취업상태별 부부갈등 1순위 차이 교차분석	79
<표 III-32> 2007년 기준 부부갈등순위별 결혼만족도 비교	80
<표 III-33> 유형별 사회복지관 수	84
<표 III-34>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85
<표 III-3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도별 설치현황	86
<표 III-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87
<표 III-37>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현황	89
<표 III-3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입소정원	89
<표 III-39>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90
<표 III-40> 가족안전망 관련 정책 현황 정리	92
<표 IV-1> 각 연도별 가구별 월 평균 소득	103
<표 IV-2> 각 연도별 경제계층 빈도 및 비율	104
<표 IV-3> 각 변인별 문항	105
<표 IV-4> 각 변수별 기술통계치	107
<표 IV-5> 소득계층별 가정환경 평균(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109
<표 IV-6> 소득계층별 자립준비도 평균(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111
<표 IV-7>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한 후 소득계층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118
<표 IV-8> 빈곤의 지속경향에 따른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진로 준비도 변량분석표	121
<표 IV-9> 과거의 빈곤 경험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123
<표 IV-10> 빈곤층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	124

<표 IV-11> 부처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130
<표 IV-12>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130
<표 IV-13>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요	132
<표 IV-14>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134
<표 IV-15>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135
<표 IV-16> 지역아동센터 사업개요	136
<표 IV-17>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개요	138
<표 IV-18>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139
<표 IV-1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개요	140
<표 IV-20> 청소년 공부방 개요	141
<표 IV-21>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142
<표 IV-2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개요	143
<표 IV-2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안전망 관련 정책현황	147

그림 목 차

[그림 III-1] 회귀분석 모형	45
[그림 III-2] 집단간 결혼만족도 차이	47
[그림 III-3] 집단간 부부갈등 원인 차이	47
[그림 III-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68



서론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한계점	6

1. 연구목적

한국은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실업과 이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겪었다. 경제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고위험사회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하는 OECD 기준에 따라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빈곤층가구의 특성으로 고령층의 빈곤화 심화와 준실업상태 가구주의 지속적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노인 빈곤가구는 ‘06년 35.1%에서 ‘09년 42.6%로 7.5%p 상승했으며, 특히 1인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아 독거노인의 빈곤화가 우려되고, 준실업상태 가구주의 지속적 증가와 관련해서는 무직 및 분류불능이 64.1%, 단순 노무종사자가 14.5%로 준실업 상태의 가구주가 77.6%에 달함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층 증가의 원인으로는 분배구조악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경기침체로 악화된 가계수지가 빈곤층 확산에 영향을 주었으며, 저임금 고용불안 상태의 근로빈곤층 확산을 들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계층 가족에게 있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족 내 역할과 관계 그리고 중심가치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이혼 및 별거, 가정폭력 등을 야기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여 가구주의 빈곤은 양자 모두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빈곤의 고착화 현상은 여성가구주에게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신용불량, 가정폭력,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해 급속히 증가한 중년의 여성가구주들이 신빈곤층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실업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남편의 미취업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며, 여성의 미취업 역시 이와 동일한 경향성

을 추론하게 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부부간의 역할을 공유한다면 오히려 결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많은 가정의 빈곤을 탈피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가구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자녀보육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가정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원이론은 개인이 가족에게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이 때 자원에는 교육, 수입, 직업, 의사결정능력, 개인의 매력도, 가정에서의 역할, 동반자적 능력, 성생활 능력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포함된다. 이 중 경제적 자원은 물질적 기반으로 개인별 차이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 부부관계성의 변화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저소득층 빈곤가정은 가족의 교육 수준 및 월평균 수입이 낮고, 비숙련 노동을 하거나 저급기술자이므로 불안한 직업구조를 갖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족성원들은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생활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아내구타의 심각성과 아동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가족원의 심리적 기제를 악화시켜 아동학대나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빈곤의 세대로의 이전, 즉 ‘빈곤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육 등 제한적 차원에서만 연구과제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빈곤탈피를 위한 자녀세대의 문화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화의 과정을 가족생활의 변화실태와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빈곤탈피에서 가족의 빈곤이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의 지속성,

장기성, 빈곤대물림의 고리를 끊어주거나 약화시키는 쪽으로 변화가 요청된다. 자녀들의 빈곤대물림을 약화시키거나 상향이동을 위해서는 자녀들 스스로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 태도와 같은 문화적 성향 획득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족의 대물림 차단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빈곤가족의 특성을 갈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문화자본의 세대간 이동, 가족 관계성, 부부만족도 흐름을 문화자본의 중요 분석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가족관계성, 가족생활 변화의 파악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가족관계성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취약계층 자녀의 빈곤의 대물림과 관련된 요인의 분석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부모와 자녀간 가족생활 및 문화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탈빈곤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패널 1,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소득계층별, 부부의 취업형태별 요인들이 부부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부부관계성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둘째, 부부관계성과는 별도로 가정 내 부부의 역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 변수와 ‘부부갈등원인’ 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소득계층별, 부부취업형태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고자 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그리고 가정폭력방지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빈곤의 지속경향, 과거 빈곤경험과 가정환경, 청소년의 자립 준비도와의 관계를 볼 것이다.

여섯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분석을 통해 정부(보건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가족의 부부관계성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도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빈곤탈피를 위한 문화적 기반 형성과 인적·문화적 자본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첫째, 관련문헌 및 정책자료 검토이다. 빈곤과 가족 문화 관련 문헌 연구, 가족 및 문화부문 사회안전망 자료 수집 및 관련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자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족생활 실태와 부모와 자녀간 가족생활 및 문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와 한국청소년패널 자료의 활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층간 사회적 이동과 이로 인한 가족문화 변화양상의 인과관계 유추와 정책적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FGI, 전문가 회의를 수행하여 다양한 현장 종사자들로부터의 실천적 제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3. 연구의 한계점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빈곤이다. 빈곤의 지속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에서는 소득계층, 그리고 한국청소년패널에서는 빈곤 유형을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부부관계와 부부폭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연관이 있음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가족생활과 아동 청소년의 가정 환경 및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를 동시에 조사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성가족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리해 분석하였기에 취약계층의 가족생활과 빈곤의 대물림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일반화하는 것에는 연구 방법론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경제위기가 소득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상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2년동안의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혼인상태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증후군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빈곤화의 경향과 특성을 이혼이나 별거보다는 부부관계성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문제점 파악 및 정책제안을 노동, 복지의 측면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적 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다학제간 연구의 일부이다. 노동과 복지관련 연구는 장지연(2010), 여유진 외(2010)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부분관계성과 빈곤 대물림의 연결성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 점과 실증적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동일선상에서 비교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개념과 범위	11
2. 경제위기와 가구빈곤의 변화	17
3. 소득계층과 부부관계	20
4. 빈곤화 과정과 빈곤의 대물림	32

1. 연구의 개념과 범위¹⁾

본 연구의 개념은 는 크게 5가지 요소, 즉 ‘경제위기’, ‘빈곤’, ‘사회안전망’, ‘젠더’ 그리고 ‘휴먼뉴딜’로 구성된다. 각 요소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위기

1997년과 2008년 한국사회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실업의 증가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과 이로 인한 가정해체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등 빈곤과 사회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차 경제위기에 비해 2차 경제위기 시점 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더 컸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허찬국 외, 2009).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997년 1차 경제위기와 2008년 2차 경제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점은 1, 2차 경제위기 모두 충격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 혹은 해외 충격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1차 경제위기는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부족 위기가 그 해 말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는 점, 2차 경제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차 경제위기와 비교해 볼 때 2차 경제위기의 국내 경제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이유로는, 1차 경제위기는 이미 이전부터 대기업들의 누적부실자산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제위기가 있는 후에는 부채의존도는 더욱 커져 이로 인한 내외부의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2차 경제위기는 지속적으

1) 이 부분은 본 협동연구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의 가족·문화, 건강, 노동, 복지 분야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개념이다.

로 경제적 불안성이 국내외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 등 신속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 실제 2차 경제위기가 도래되었을 때 그 충격이 사회 구성원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부실자산을 예방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1차 경제위기에 비해 2차 경제위기의 경제적 영향이 다소 낮았던 이유로 할 수 있다.

나. 빈곤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였다. 그렇다면 빈곤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poverty)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빈곤을 단순히 자원이라는 경제적 수단과 이를 통한 물질적 욕구충족이라는 좁은 의미로 제한하였다. 물론, 비경제적 의미로서 빈곤을 고려할 경우 그 의미와 범위는 훨씬 크고 복잡할 것이다. 예컨대, 빈곤은 낮은 교육수준, 낮은 건강(의료) 및 복지 서비스, 건강하지 않은 가족구조 및 지역사회의 낮은 사회적 지지와 신뢰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또한 반대로 이런 특성들로 인해 빈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개인의 기본욕구와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상호 연결되어 있어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영역을 어느 선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빈곤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빈곤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사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obsbawm (1974)는 빈곤에 대해 다양한 특성들이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정한 사회의 관행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유진 (2005) 또한 빈곤의 정의가 특정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절

대적 빈곤 개념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절대적 빈곤 개념으로 Rowntree(1901)는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적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를 빈곤으로 간주하였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Twonsend(1974)는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인 혹은 최소한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이 결여될 때 빈곤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다. 젠더

젠더(gender)는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사회적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 성 역할, 곧 젠더 역할은 표면적으로 외모, 음성,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이 여자 혹은 남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젠더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빈곤과 불평등이 있다.

젠더 간 빈곤 차이의 중요한 원인으로 유교적인 가부장적 제도에서의 교육과 경제활동이 여성에게 극히 제한적인 한국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빈곤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높았다. 그러나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과 경제활동의 자원접근도가 여성에게도 유리한 오늘날에도 여성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사회적 성 역할, 즉 젠더와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질서와 보상구조,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남성의 생계부양역할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이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97년 1차 경제위기 이후 남성생계부양자의 부양능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면서 여성은 전통사회의 성 역할인 아내지위와 모성지위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신하여 노동지위까지 부여 받게 되었다(김수정, 2007). 그러나 노동시장의 성별분절 현상 및 임금차별구조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소득능력에 기초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여성의 빈곤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

히,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노동과 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노동직위의 취약성이 높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Casper 외(1994)은 과거의 여성이 지닌 경제적 취약성은 가족, 특히 남성생계부양자에 의해 은폐되어 있었으나, 오늘날 가족이 경제위기로 인해 더 이상 은폐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직위 부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및 여성의 빈곤문제가 드러난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빈곤문제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우리사회는 취약계층 및 위기상황에 직면한 집단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 사회 안전망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빈곤층의 증가 등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경혜, 2009). 사회안전망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김상균, 2005). 일반적으로 1차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며, 3차 사회안전망은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및 구호제도로 구분된다.

현재 사회보험(1차 사회안전망)으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작동 중에 있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는 1961년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범위가 확대되

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회원국의 최하위 수준에 거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차 경제위기 이후에는 취약계층인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필요성과 함께 사회지출의 비중 증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휴먼뉴딜정책의 취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고 빈곤층과 중산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내용과 접근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빈곤층은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이 정책수단이 되어야 하는 반면, 중산층은 노동연건을 유지 및 개선하여 스스로 소득보장의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였는데,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지원도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안전망은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족해체, 건강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문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사회안전망의 주요 요소로 간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경혜, 2009).

마. 휴먼뉴딜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빈곤화 추세가 지속화되면서, 사회적 결속력 및 지속성장 기반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정부는 휴먼뉴딜(Human New Deal)의 표제 하에 중산층 탈락 방지 및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등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휴먼뉴딜 정책은 이전의 사후적 빈곤층 보호에 치중되었던 수동적 사회복지정책²⁾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정책³⁾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문형표 외, 2009). 즉, 수동적 복지정책이 위협에 처한 사람

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증시킨 방식이라면, 능동적 복지정책은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데 투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사회에 휴먼뉴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와 소득격차 문제 등 사회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문제 발생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개입인 수동적 복지정책에 치중한 원인이 크다 할 수 있다. 21세기형 복지는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접근,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적역량(human capital) 증진은 한국의 지식경제사회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휴먼뉴딜 정책은 각 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상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증가시켜 중산층이 두터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투자를 통하여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회 평등의 보장은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이다. 즉, 인적역량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회평등이 보장되면,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사회이동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계층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열과 갈등이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이며, 이는 사회통합을 통해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휴먼뉴딜의 비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 그리고

-
- 2) 수동적 복지(passive welfare): 사회적 위험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구출해 내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주로 선택한 방식임.
 - 3)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어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이런 사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본 연구의 주요 요소의 개념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가족·문화, 노동, 복지 및 건강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변화를 파악하여, 사회안전망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빈곤과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오늘날의 휴먼뉴딜이 추구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경제위기와 가구빈곤의 변화

가. 도시가구의 빈곤을 추이(1997년~2008년)

2차에 걸친 경제위기에서 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에 있어 빈곤율은 점점 높아지지만 지출에 대한 빈곤율은 차이가 없어 소득 대비 지출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1997년부터 2008년 까지 지난 10년간 소득(시장소득,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 50%의 도시근로자 연간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위 50%의 연간 소비율의 변화는 소비지출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가계지출에 있어서는 다소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지출에 비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II-1, 표 II-2> 4)

중위 50%의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도시근로자의 연간 빈곤율을 소득과

4) 빈곤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absolute poverty line)과 상대적(relative) 빈곤선의 기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시한 전체소득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1/2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였다. 또한 빈곤측정의 기준은 소득(income)을 사용하였고, 가구(household)를 단위로 상대적 빈곤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빈곤 관련 연구들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실질적인 빈곤의 규모나 특성을 측정하고 파악하지만, 그럴 경우 가구규모, 즉 가구원수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김교성, 2007).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소득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총합이고,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총합이며,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총합에서 직접세와 사회보험분담금의 총합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여유진, 2010).

지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면에 있어서의 빈곤율은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면에서 모두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 면에서는 8.7%에서 10.8%로 2.1%p 증가했고, 경상소득 면에서는 8.9%에서 10.8%로 1.9%p, 가처분소득 면에서는 8.7%에서 10.6%로 1.9%p 증가하였다.

또한 1997년에서 2008년까지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다소 증감의 폭이 있지만, 1997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볼 때 소득 면에서의 빈곤율은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소득 면에서는 1997년의 8.7%에서 2008년 11.9%로 3.2%p 증가하였으며, 경상소득 면에서는 8.9%에서 10.8%로 1.9%p, 가처분소득 면에서는 8.7%에서 10.1%로 1.4%p 증가하였다.

〈표 II-1〉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빈곤율: 소득⁵⁾

(단위: %)

구 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997	8.7	8.9	8.7
1998	10.8	10.8	10.6
1999	10.8	10.5	10.5
2000	10.2	10.0	9.6
2001	10.3	9.7	9.7
2002	10.1	9.6	9.3
2003	11.3	10.7	10.6
2004	12.3	11.6	11.1
2005	12.4	11.7	11.2
2006	12.3	11.2	10.8
2007	12.5	11.2	10.7
2008	11.9	10.8	10.1

주: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도시가계의 단점은 1인 가구 및 농어촌지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 가구만 제공되었다. 2003년 가계조사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및 농어가 가구가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 외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지출자료는 제공되고 있다. 2006년 가계조사는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단지 농어가 가구만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국가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김태완 외, 2009).

지출 면에서의 빈곤율은 소득의 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감의 폭이 있지만, 소득의 빈곤율과 유사하게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비교적 큰 폭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 면에서는 1997년 6.4%에서 1998년 7.8%로 1.4%p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 면에서는 1997년 7.0%에서 1998년 8.8%로 1.8%p 증가하였다.

또한 1997년에서 2008년까지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소비지출 면에서는 1997년의 6.4%에서 2008년의 6.8%로 소폭 증가하여 비슷한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지출 면에서는 1997년의 7.0%에서 2008년의 8.4%로 1.4%p 증가하였다.

〈표 Ⅱ-2〉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빈곤율: 지출

(단위: %)

구 분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7	6.4	7.0
1998	7.8	8.8
1999	7.1	8.1
2000	6.9	7.9
2001	6.0	7.1
2002	6.3	7.1
2003	6.5	7.4
2004	6.2	7.8
2005	6.9	8.3
2006	6.9	8.2
2007	6.9	8.3
2008	6.8	8.4

주: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도시가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도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약 5,200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한 것이다(통계청, 2003).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데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정 정도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간계조사는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추이를 연구함에 있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용 가능한 유일한 미시자료(micro data)로써 사용된다(김교성, 2007).

3. 소득계층과 부부관계

가. 소득계층과 기혼취업여성의 부부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정의는 그 관계성을 어떠한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Mace and Mace(1976)은 생애주기에 따라 남녀 두 사람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남녀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 관계라고 한다(고희숙, 2002, 재인용).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Eastman(1958)은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자기수용 및 타인 수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Mattson(1988)은 부부관계향상이란 부부들로 하여금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자신과 배우자에게 더욱 더 절실하게 하는, 특히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조력하는 기법이라고 했다(이정미·김정옥, 2006 재인용).

자원이론에 따른 부부관계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 부인의 취업이나 사회경제적 변수가 부부관계성에 미치는 연구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자원의 유무와 부부관계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실증적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Blood and Wolfe(1960)의 연구에서 출발한다. 물론 50여년이 지난 현재 미국이나 한국사회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소득계층에 따른 부부관계성의 분석결과는 어떠한 경향이나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Blood and Wolfe(1960)는 남편의 소득별 기혼여성의 취업과 미취업에 따른 부부관계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연소득이 5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 기혼여성의 부부관계성이 미취업 기혼여성의

부부관계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소득이 5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 기혼여성의 부부관계성이 미취업여성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ye(1961)의 연구 결과에서는 각각 남편의 직업군에 따른 취업-미취업 기혼여성들의 부부관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편의 직업군이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인 경우에 부인의 취업-미취업에 따른 부부관계성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직업군에 따라 기혼여성들이 취업과 미취업의 여부가 부부관계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분석으로는, 우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맞벌이 부부 혹은 기혼여성의 일자리는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보상이나 감사가 부부관계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일 저소득층 가정에서 여성이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나 경제적 압박감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이 자신만 경제활동을 하고도 남편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감사를 받지 못한다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취업한 기혼여성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계를 부담해야한다는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취업 상태가 부부관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소득층 계층에서 여성의 취업은 기혼여성이 가사일이나 남편에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lood and Wolfe, 1960).

Nye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부부관계성은 여성의 취업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취업의 형태가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Nye는 저소득층의 취업여성의 경우에 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은 반복적이고 지루하거나 업무 만족도가 낮고 직업의 위상이 낮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고소득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가정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취업 요인이 부부관계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Nye, 1961).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비율과 이혼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여성의 취업이 결혼생활의 불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기혼여성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한 남편들의 삶의 질 저하가 이혼을 결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들은 여성의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독립적인 소득은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 처한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가정한다(Marvin B. Sussman et al., 1999).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반박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취업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경제적 분석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많은 가정의 빈곤을 탈피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가구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보육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가정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과 이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나오고 있다. 중·고소득층 가정에 비해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이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의 미취업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며, 여성의 미취업 역시 이와 동일한 경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Marvin B. Sussman et al., 1999).

자원이론은 개인이 가족에게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이 때 자원에는 교육, 수입, 직업, 의사결정능력, 개인의 매력도, 가정에서의 역할 성과, 동반자적 능력, 성생활 능력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포함된다. 이 중 경제적 자원은 물질적 기반으로 서 개인별 차이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원이론이 특별히 주목

하는 요소이다. 개인이 투여한 물리적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개인 구성원의 힘이나 영향력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Blood and Wolfe, 1960; 조혜선, 2003).

스캔조니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평등에 도달한 부부가 자원이 불평등한 부부에 비해 결혼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부부간에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양은 가족 내에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권력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부부의 교육, 수입, 직위, 사회적 참여와 같은 자원이 비슷할수록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자원이론이 대표적 이론으로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다(조혜선, 2003 재인용).

결혼만족도의 개념화 문제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만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만족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제시되는 상이한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된다.

첫째로 Burr와 Constantine(1987)의 견해에 따르면, 만족이란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만족이란 기대만큼 실제로 보상을 받거나 평균보상이 기대수준 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만족의 개념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란 태도나 주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결혼 및 배우자에게서 기대한 것과 자신이 실제로 받은 것과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Hawkins, 1968) 정의되며 따라서 보상이 크면 만족을,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만족의 개념은, 만족과 불만족을 양립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 행복과 불행, 충족과 불만 등의 감정들을 매우 만족에서부터 불만족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Burr and Constantine, 1979).

한편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결혼만족도에서는 주로 후자의 만족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결혼만족이란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

관계에 대해 만족한 감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으로써 두 사람은 의미 있게 서로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다(Hawkins, 1968).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정대상은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결혼만족의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만족에 포함된 측정 내용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즉, 좁게는 부부관계에 관련된 측면만으로 제한하여 측정한 경우와 넓게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측면들을 모두 포함시켜 측정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애정 및 성, 의사소통, 동료감, 의견일치, 갈등, 배우자의 역할수행, 성격 등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경제, 건강, 여가, 사회활동, 직업, 자녀, 친인척 관계, 친구, 자아개념 등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혼안정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이미숙, 1990; 홍윤정, 1996).

나. 부부의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역할분담에 초점을 둔다. Kimball(1983)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권리·책임·의무가 분담되고 개방적인 대화·상호존중·우애 등으로 밀착되어 돈벌이·집안일·육아·의사결정을 상호분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변화순, 2010 재인용).

유희정 외(1998) 역시 가사노동은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 여성이 거의 전담하고 있었고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더라도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지속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 무보수 노동으로 간주해온 사회적 통념이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노동시장에 참여한 취업여성에게 대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교육, 노동에서의 형식적 권리와 평등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면서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남성에게 대한 경제적 의존자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변화순 외, 2000 재인용).

Davidson(1984)도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와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공평성이 확보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결혼생활 적응이 높다고 하며, 특히 남편보다 부인의 경우 유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실제 가사노동의 분담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간 공평성 인지가 부부관계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박민자, 1992). 공평성 인지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과들은 관계가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부부관계에서는 만족감·친밀감·감사함·안정감·관계몰입·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한 부부관계에서는 우울·분노·죄의식·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결혼만족도·관계몰입 정도 및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전지원, 2000).

가사노동에 대한 공평성 인지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관이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상대방과 자신에 대해 적용하는 성역할관은 각 성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 행동인지를 규정하는 경계 체계이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더 이상 특별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여성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분위기에서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남성은 재정적 부양자, 여성은 가정 책임자로 규정된 전통적인 전형화는 아직까지 성역할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위치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전형화는 해당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조혜선, 2003). 성역할관은 주관적인 신념의 체계에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실제생활에서 나타난다. 가정 내 역할분담에서 성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가사노동분담이다. 이 영역은 가정에서 가장 비합리적으로 경영되는 부분이다(Wilkie et al., 1998).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는 미미한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Coverman, 1986).

최근의 연구들은 가사노동에 투여한 시간이라는 양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가사노동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oltrane and Ishii-Kuntz, 1992; Lennon and Rosenfield, 1994).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가사노동의 분담과 형평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의 형평성이 부부 관계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다. 도시빈곤층의 부부폭력과 자녀학대

1) 부부폭력

부부폭력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요인과 특성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폭력 관계 부부의 상호작용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Lloyd & Emery, 1998). 즉, 부부간 폭력을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상호작용이란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부부간 상호작용을 핵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부부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장 일차적이며 가까운 체계인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 유형은 다른 원인을 촉발시켜 폭력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 역시 부부체계의 산물로 이해하여야 한다(김재엽, 2007).

Davis(1987)는 가정폭력 남성의 특성은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했다. 부부의사소통이 가정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부의사소통의 각 특성도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부부폭력은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력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왜곡은 폭력을 촉발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그 결과 이성적인 대화와 설득보다는 직선적인 발언과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쉽고, 이것이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Giles(1983)는 가정폭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의 개인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부부체계 내에서의 부부간 상호작용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Yegidis(1992)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이 부부간 상호작용의 진

행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부의사소통과 부부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국외 선행연구들도 부부의사소통의 과정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부부는 쟁점에 대해 명백하고 성숙한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토론하고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폭력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Madances, 1981).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대화내용에 대해 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부부가 함께 조율하는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리라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살펴보는 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다.

부부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성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독립된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각 가족 내에서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족성원은 개인의 정체감을 상실하고, 정형화된 역할에 자신을 끼워 맞추게 된다. 이렇게 각자 자기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면 가족성원의 불건강이 초래된다. 따라서 가족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분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발달시켜야 한다.

아내폭력에 대해 남성들은 그 원인을 아내에게 두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남편의 가정환경, 혹은 상습적인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폭력, 아내에게 물건을 던짐, 아내를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0).

도시 저소득층 빈곤가정은 가족의 교육 수준 및 월평균 수입이 낮고, 비

숙련 노동을 하거나 저급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한 직업구조를 갖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족성원들은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빈곤한 가정은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선행연구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다. Dibble과 Straus(1980)의 연구에 의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남성들의 배우자 폭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lbrich와 Huber(1981)의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입의 범주에 있는 집단이 가장 높은 수입 범주에 있는 집단보다 아내 구타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재엽, 2007 재인용).

한편 김재엽(2007)의 연구에서 빈곤가구의 의사소통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빈곤가구에서 남편과 아내는 의사소통을 할 경우 서로 존중하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등 기능적 방식을 사용하기보다 공격하고,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회유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역기능적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이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공격형, 아내의 경우 산만형의 대화 유형을 가진 경우에 가정폭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부부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부부폭력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층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부부폭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부부의사소통은 단지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의 건강성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사소통을 기능적이고 원만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단지 부부폭력문제의 해결이라는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부부와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빈곤가구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고, 부부 및 가족의 건강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 부부에 접근할 때 다양한 영역 가운데 부부의 의사소통 영역에 초점을 두는 개입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부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사소통을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이나 치료에 있어서도 주된 개입 대상자를 아내보다는 남편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부부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단지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역기능적인 것에서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녀학대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Gil(1971)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으며, Whipple(1989)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아동학대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낮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과 불화의 심화 정도가 아동학대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고한 국내 연구들도 있다(황영희, 1984; 장화정, 2000).

가족의 낮은 경제적 수준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경제적 압박감이 가족원의 심리적 기제를 악화시켜 방임이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신영화, 1986; 김광일 · 고복자, 1987). 특히 아버지의 실직 상태에서 자녀의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학대 부모의 내적인 스트레스는 비슷하다는 보고도 있어(Ruth & Kempe, 1978),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데, Deutsch(1980)와 Calvert(1986)는 아동학대를 행하는 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Korbin(1981)은 환경적·사회적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변화순(1988), 김광일 · 고복자(1987)

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대의 원인이 부모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재엽, 2007).

여진주(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낮은 경제적 상태는 부부불화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다툼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나, 혹은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 가정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 해체되었을 가능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경우 모두 아동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방임이나 학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을 검증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모두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각각은 아버지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스트레스 정도는 아버지의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부부의사소통이 아버지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아동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및 부부의사소통 모두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개입의 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치료 또는 부부치료를 통해 부부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로부터 아동학대

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학대아동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이다(Green, 1985). 피학대아동은 단순한 사고과정을 통해 부모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학대받아 마땅한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한다(Briere, 1992). 이렇게 생각하는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어렵다. 또한 피학대아동은 학대행위를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된다. 학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자아발달을 위축시키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준다(Cerezo and Frias, 1994).

부모의 학대는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 및 주변 세계에 대한 내적 신념을 함께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시키고 강화해주어야 하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인식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위축되게 된다(정익중 외, 2006).

피학대아동들은 인지적 결손, 학교준비 부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낮은 인지학습능력을 보인다(나은숙·정익중, 2007; Gelles and Straus, 1990; Kolko, 1992). 부모의 가혹한 대우나 거부적인 훈육은 자녀의 자기가치를 훼손하고 자기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자기신뢰를 상실한 아동은 자신의 학구적 노력이 미래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있어 방해를 받게 된다.

4. 빈곤화 과정과 빈곤의 대물림

가.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는 한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형평성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면중 하나이다(이상은, 2008). 사회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되물림되어 한 세대의 사회적 격차가 다음 세대에도 반복되거나 재생산되는 경우인데(사회통합위원회, 2010), 이것이 심화되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 멀어지게 되며 사회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 김희삼(2009)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이 높았으나, 첫째,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성장이 그만한 고용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 일자리 수 증가 자체가 정체되고 있다는 상황, 둘째, 사교육시장의 심화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고소득층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셋째, 이후 세대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적 대물림도 더 심화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각 부분에서 소득계층간 불평등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위하락을 경험한 개인이나 가구가 사회적 지위의 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자녀세대로 세대간 빈곤이전을 차단하고 탈피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는 유전적 요인론, 인적자본투자론, 가족매개모형, 사회화 및 역할모델론이 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는 유전요인론은 능력과 빈곤의 관계, 부모와 자녀간 능력의 유전을 강조하는데, 부모의 IQ 또는 건강요인 등 부모의 미약한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됨으로써 자녀 또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Herrnstein and Murray, 1994). 인적자본투자론은 미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모의 금전적, 시간적 투자는 투자에 대한

비용(cost)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투자의 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Becker, 1981).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의식주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는 아동의 낮은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있다(Becker & Toms, 1986). 인적자본투자론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자녀의 인적자본투자의 차이를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가져오는 주요요인으로 본다. 한 가구에서 부모는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현재의 소비와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간에 일련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의 인적자본향상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빈곤가구 자녀들은 인적자본축적 수준이 낮고 그 결과 이들의 성인기 소득수준이 낮아져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Haveman and Wolfe(1955)는 부모능력과 부모교육수준은 가족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소득수준은 자녀에 대한 시간투입의 질, 시간투입의 양, 재화투입의 질, 재화투입의 양이라는 가정의 투자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자녀의 최종학력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학력수준은 다시 성인기 자녀의 소득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부모능력과 부모교육수준이 유전적으로 자녀에게 전이가 되면 이것이 자녀의 능력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최종학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빈곤 또는 소득 상실을 경험한 계층에서 아동의 발달저하를 설명하는 가족매개모형(family mediating model)에서는 저소득 상황이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가 커져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특히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김광혁, 2010). 가족매개모형에서는 낮은 가구소득수준이나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가족과정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화 및 역할모델 관점에서 세대 간 빈곤의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빈곤문화론, 복지문화론, 하위계급론을 들 수 있는데 3가지 이론 모두 가족 및 지역에서의 빈곤문화와 사회화 및 역할모델 부재에 따른 빈곤의 세습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상은, 2008). 먼저 빈곤문화론은 주류사회의 문화가 있고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된 빈곤한 지역사회에도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며, 빈곤문화는 빈곤 탈출을 저해하고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화가 일단 형성되면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 영속하게 되며 빈곤문화의 전수에 의해 세대간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Lewis, 1968). 복지문화론은 빈곤문화의 형성과 전수에 있어서 빈곤문화와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빈곤지역의 경우 이미 빈곤문화에 젖어있는데, 부모와 그 지역사회의 대부분이 정부 복지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복지수급에 대한 낙인효과가 감소되고 복지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복지제도는 빈곤지역의 빈곤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조장하게 되어 빈곤의 세대간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위계급론은 대도시 빈곤지역의 빈곤 세습화 문제에 대해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역할모델 부재에 따른 부적절한 사회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나. 빈곤의 세대간 이전 및 빈곤탈피에 대한 선행연구

이상은(2008)은 한국의 세대간 빈곤 이전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5년)를 이용하여 분석을 했다. 그 결과는 첫째, 아동기 빈곤과 자녀의 성인기 빈곤간의 이행관계를 보면, 아동기에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인기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심각한 빈곤에 처한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정도가 더 심하다. 둘째, 그러나 아동기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성인기에 빈곤을 탈출한 경우도 높게 나타난다. 셋째, 빈곤한 부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가 부족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육수준이 낮아 소득이 낮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세대 간 세습이 이어지게 된다. 넷째, 성별로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와 자녀 간 빈곤의 세대 간 이전정도가 높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출신 빈곤가정 아동이 농촌출신보다 성인기 빈곤으로 세대 이전되

는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코호트별로는 5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와 높은 연령대의 코호트의 경우 빈곤세습정도가 더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이나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 상황 악화와 빈곤 및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2010)은 서울아동패널, 한국청소년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교육중단패널을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김광혁은 가구소득의 영향 또는 그 수준별 영향의 차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린 시기의 아동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고소득층이나 중간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보인다.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들의 매개적 작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가 저소득층에서는 인지적 자극정도인 반면, 중간층 또는 고소득층에서는 사교육비가 주요한 매개변수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인지적 자극이 기초되지 않은 상태의 학업성취도 향상전략인 사교육지원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여유진 외(2007)는 교육이 아동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기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1985년부터 2006년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했으며, 가족의 경제, 사회적 배경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한국고용패널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이동의 경향을 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대물림되는가를 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자녀의 교육수준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자녀의 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일치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계급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종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아버지의 직종과 자녀의 직종간에 대응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경로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로 직접 이전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고 하며,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이 상호작용하는 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교육의 포괄적인 평등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진희(2007)는 우리사회에서 빈곤세습이나 빈곤탈피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이라는 가정배경만이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 내 자본을 물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보고 가정배경 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그 학생이 속한 가족구조와 경제적 배경에 따라 부모의 학력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 부모 학력, 가족구조 보다는 가족에서의 사회적 자본,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부모와 자녀간 대화 등의 친밀성이나 자녀에 대한 통제, 정서함양활동 등의 문화적인 변수가 더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는 한 사회의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형평성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중의 하나이기에 빈곤의 세대이전 정도를 연구하는 것은 빈곤탈출을 위한 전략 마련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학력을 중요시하는 우리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이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어 빈곤이전과 관련하여 부모의 소득, 학력수준이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가정배경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 또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혜숙 외(2009)는 사회적지원의 정도와 빈곤극복의지를 중심으로 빈곤 유형을 의지형, 의존형, 좌절형, 희망형으로 분류하고 빈곤화단계를 빈곤진입단계, 빈곤탈출 희망과 노력단계, 빈곤심화단계, 빈곤 장기화와 대물림 단계로 유형화하여 빈곤 대물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문헌들이 빈곤의 요인과 빈곤화과정을 저학력과 그로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가장의 실직과 사고, 질병, 이혼, 인적자원 및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하며, 빈곤가정 중 청소년기(8세~18세) 자녀를 둔 빈곤가정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빈곤극복의지와 가용자원간의 관계를 가지고 빈곤대물림 현상을 정리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빈곤극복의지가 약하면 사회적 자원, 가족응집력, 심리적위축감 등 다른 제반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빈곤탈출노력이 적어 빈곤이 강화되거나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자원, 가족응집력, 심리적위축감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있고 빈곤극복의지가 있는 경우는 빈곤에 빠지기는 했지만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빈곤의지만 강할 뿐 다른 제반 여건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빈곤탈출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탈출이 쉽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민경화(2004)는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은 빈곤가정의 경제적 측면에만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빈곤가정이 겪는 가족 성원 개개인의 문제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부모-자녀관계, 특히 아동의 발달상태 등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빈곤탈피를 위해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화패턴 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김창곤, 2006).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평가로 학업성적이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자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심미경,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운경·도현심, 2005). 아동청소년이 부모 혹은 중요한 성인과의 친밀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할수록, 성인들은 그들의 인적·경제적 자본을 아동청소년에게 더 투자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신원영, 2010).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신뢰 및 유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관심과 격려는 낮은 경제적지위에 있는 자녀의 귀속적 요인에 기인한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원영, 201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빈곤의 세대이전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중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매개변인들을 찾아냄으로써 빈곤탈피를 위한 정책방안이나 전략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해주고 있다. 이경림(2006)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92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가족유형별로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서 지지원으로 주양육자, 친구, 학교교사, 지역센터 교사를, 지지내용으로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 지지를, 아동역량으로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자아가치 역량의 6가지를 아동역량으로 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가족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원이 아동역량의 자아가치 역량에 매개효과로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빈곤가족아동 중 부가족아동과 조손가족아동에게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교선생님의 지지를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면 아동의 자아가치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내용, 아동역량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동이 인식한 주관적 빈곤감이었다. 아동이 주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원, 지지내용의 지각과 아동역량이 높음을 지적하며 가족의 절대적 빈곤보다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이 아동역량에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내용을 통한 지각정도가 아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제공자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가 프로그램화되고 평가되는 것을 지양하고, 아동이 실제로 제공받았

다고 생각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만족도평가를 하는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황덕순(2001)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분기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에서, 빈곤의 진입 및 탈출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경림(2007) 역시 가정의 빈곤은 아동의 지적능력, 사회성, 심리정서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은 단순히 아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요인을 갖지 못한 경우 성인기빈곤으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빈곤이 아동발달과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호요인, 즉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면 뛰어난 적응력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해경 외(2009)는 기타의 다른 요인은 약하다고 해도 사회적 자원이 많고 가족응집력이 강한 희망형의 경우 빈곤탈출 가능성이 커지며 또 빈곤극복의지가 강하고 다른 모든 요인이 약한 경우라고 해도 가족응집력이 강한 경우는 빈곤 대물림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 있다. Chung(2004)은 빈곤 때문에 범죄, 실업 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합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사회적 소외로 특징지어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적 소외는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들이 따를 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Coleman(1988) 역시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결핍, 부정적인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의 부족,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 박현선(1998)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가 부정적, 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지가 있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빈곤의 세대이전 탈피에 관심을 두고 부모의 빈곤이 거주지역

40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가족·문화부문

과 연관성이 있는지와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소득계층과 부부관계성 패널 조사분석

1. 조사개요	43
2. 조사결과 분석	48
3.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분석	83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데이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 분석 자료로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크게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족-일-일상생활의 3가지 주요영역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실태, 가족가치관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총 9,068가구에 거주 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07년과 2008년까지의 2차년도 패널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성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부갈등원인과 결혼만족도를 부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년도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총 7,868명, 2차년도는 총 6,725명으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나. 주요변수 측정도구와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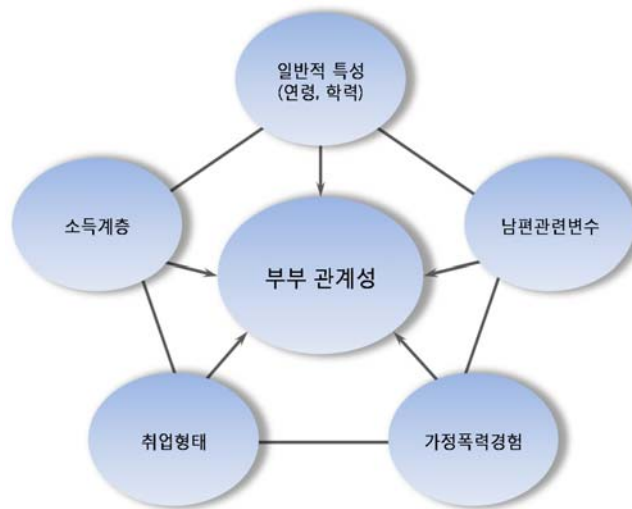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립변수와 부부관계성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부관계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학력 변수, 경제적 요인인 소득계층 변수, 취업 요인인 부부의 취업형태 변수, 남편과의 관련 요인인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 부부동반활동의 정도, 가정폭력경험 유무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2007년과 2008년의 한국에서의 2차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소득계층 요인과 취업요인 그리고 남편과의 관련 요인들이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부관계성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결혼만족도’ 변수와 ‘부부갈등원인’ 변수를 분석하여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두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과 집단간 분석(t-test, ANOVA, χ^2 검증)을 통하여 부부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원인 변수를 사용하여 연령별, 소득계층별, 부부의 취업형태별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1)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모형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부관계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 중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의 연령과 학력 연수 그리고 남편의 학력을 먼저 투입하였고, 소득계층 특성으로 월총소득을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고소득층 집단을 준거로 저소득층 더미변수와 중산층 더미변수를 다음으로 투입하였다. 부부의 취업형태 변수는 부부의 취업유무를 통해 부부가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부부 중 여성만 취업한 상태, 남편만 취업한 상태, 그리고 부부 모두가 취업한 맞벌이 부부의 4개의 집단 중 부부 모두 취업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로 그 외 집단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기혼유배우자 여성들과 남편과 관련된 변수 중 부부의 동반활동 정도 변수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여성의 주관적 만족도 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은 폭력 경험을 기준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집단과 한 번 이상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험이 없는 집단을 준거하여 유경험 집단을 투입하였다. 최종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부부관계성} = & \beta_0 + \beta_1(\text{여성의 연령}) + \beta_2(\text{여성의 학력}) + \beta_3(\text{남편의 학력}) \\
 & + \beta_4(\text{중산층더미}) + \beta_5(\text{저소득층더미}) \\
 & + \beta_6(\text{여성만 취업}) + \beta_7(\text{남편만취업}) + \beta_8(\text{맞벌이부부}) \\
 & + \beta_9(\text{남편에대한가사노동분담만족도}) + \beta_{10}(\text{부부동반활동정도}) \\
 & + \beta_{11}(\text{가정폭력경험})
 \end{aligned}$$



[그림 Ⅲ-1] 회귀분석 모형

〈표 Ⅲ-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문항내용	
종속 변수	부부관계성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4점 척도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사랑(신뢰)한다	
독립 변수	일반적 특성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연령, 학력연수, 남편의 학력연수	-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준거집단: 고소득층
	부부의 취업형태	부부모두무직, 여성만취업, 남편만취업, 맞벌이부부	준거집단: 부부모두무직
	부부동반활동 정도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하기	5점 척도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형제들을 만나기	
		부부가 같이 친정부모님이나 친정형제들을 만나기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남편이 집안일(설거지, 청소, 자녀 돌보기 등)을 분담하 는 정도에 대해 만족 하는가	5점 척도
	가정폭력경험 (CTS) 유무	일주일 이상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기	준거집단: 전혀해당사항 없음
		심한 말(폭언, 욕설 등)을 하거나 듣는 것	
		신체적으로 부딪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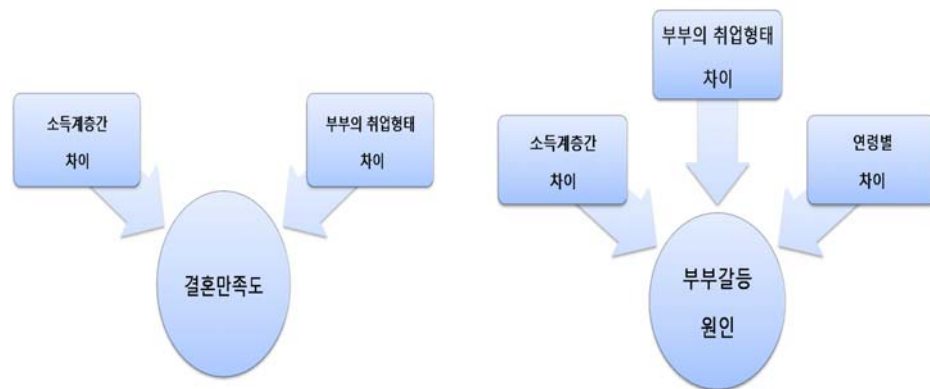
2)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에 대한 분석

부부관계성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의 추이와 집단간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부관계성과 유사한 개념이면서, 부부관계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부간의 역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과는 별개로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에 대한 기술

분석과 집단간 분석을 실시하여 부부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Ⅲ-2>와 <그림 Ⅲ-2>, <그림 Ⅲ-3>은 분석에 대한 변수설명과 분석틀이다.

〈표 Ⅲ-2〉 추가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문항내용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총1문항, 7점 척도
부부갈등의 원인	경제적 문제	총8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자녀교육 문제	
	시부모님과의 관계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본인 또는 남편의 친구 관계	
	부부간 가사분담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그림 Ⅲ-2] 집단간 결혼만족도 차이

[그림 Ⅲ-3] 집단간 부부갈등 원인 차이

2. 조사결과 분석

가. 1, 2차 여성가족패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일반적 특성⁶⁾

1, 2차 여성가족패널 응답자 중 기혼유배우자 여성을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계층·취업상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 연령 분포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인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총 7,868명으로, 연령대는 10대에서 60대까지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다. 그 중 30대가 35.8%, 40대가 27.9%로 많았으며, 50대 20.8%, 60대 8.1%, 20대 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남편의 연령은 20대에서 70대까지 분포되어 있다. 남편의 연령대 비율은 40대 30.9%, 30대 29.4%, 50대 20.6%, 60대 14.9%, 20대 3.1%, 그리고 70대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연령 분포
(총:7,868명/100%)

구분	기혼유배우자 여성		남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10대	1	.0	-	-
20대	577	7.3	240	3.1
30대	2,816	35.8	2,314	29.4
40대	2,199	27.9	2,428	30.9
50대	1,634	20.8	1,620	20.6
60대	641	8.1	1,174	14.9
70대	-	-	84	1.1
결측값	-	-	8	-

6)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이나 학력과 같이 연도별 값의 차이가 없거나 일정한 변수의 연도별 분석은 본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나) 학력

기혼유배우자와 남편의 학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력의 범주를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졸의 범주에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원 범주에는 석·박사 과정이 포함되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기혼유배우자와 남편의 학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고졸 41.0%, 대졸 28.9%, 초졸 14.6%, 중졸 12.0%, 무학 1.8%,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대졸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36.3%, 중졸 10.6%, 초졸 10.2%, 대학원 4.2%, 그리고 무학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혼유배우자 여성에 비하여 남편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6%p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11%p 높게 나타났다.

〈표 Ⅲ-4〉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학력 분포

(총: 7,868명/ 100%)

구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학력		남편의 학력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무학	144	1.8	105	1.3
초졸	1,147	14.6	798	10.2
중졸	944	12.0	828	10.6
고졸	3,222	41.0	2,845	36.3
대졸	2,272	28.9	2,930	37.4
대학원	135	1.7	333	4.2
결측값	4	-	29	-

다) 월 총소득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월 총소득은 2007년에는 200만원대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만원대 21.3%, 100만원대 18.1%, 500만원이상 13.2%, 100만원미만 10.0%, 400만원대 9.7%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은 2007년에 비하여 월소득의 변동이 별로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중·저소득층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소득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상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빈곤화의 경향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의 한계점은 내재되어 있다.

〈표 Ⅲ-5〉 연도별 월총소득 분포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100만원미만	749	10.0	597	9.0
100만원대	1,354	18.1	1,186	17.9
200만원대	2,081	27.8	1,680	25.3
300만원대	1,596	21.3	1,488	22.4
400만원대	731	9.7	788	11.9
500만원이상	987	13.2	896	13.5
결측값	370	-	90	-
평균값	288.15(만원)		291.95(만원)	

2)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혼인관련 특성

가) 혼인상태

기혼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앞서, 2007년과 2008년도 여성가족패널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의 혼인상태를 살펴보고 그 추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2007년 여성가족패널 전체 응답자 9,997명 중 기혼유배우자의 경우가 7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혼 12.3%, 사별 5.2%, 이혼 3.1%, 별거 0.7%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역시 2007년도 대비 혼인상태의 변동은 크게 없었으나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혼의 비율이 2%p 정도 감소하고, 기혼유배우자 비율이 2%p 정도 증가했다.

〈표 Ⅲ-6〉 연도별 전체 여성의 혼인상태 비교

(2007년 총: 9,997명, 2008년 총: 8,364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미혼	1,226	12.3	857	10.2
기혼유배우	7,868	78.7	6,725	80.4
별거	70	.7	57	.7
이혼	314	3.1	253	3.0
사별	517	5.2	472	5.6
결측값	2	-	-	-

혼인상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연수를 살펴본 결과, 2007년을 기준으로 11-15년차 16.9%와 6-10년차 16.5%가 가장 많았으며, 16-20년차 13.5%, 1-5년차·36년이상 12.3%, 21-25년차 9.7%, 26-30년차 9.5%, 31-35년차 9.3% 순이었다.

〈표 Ⅲ-7〉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연수 분포

(2007년 총: 7,868명)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1-5년차	967	12.3
6-10년차	1,295	16.5
11-15년차	1,325	16.9
16-20년차	1,055	13.5
21-25년차	762	9.7
26-30년차	745	9.5
31-35년차	728	9.3
36년이상	966	12.3
결측값	25	-

나) 혼인상태 변동 원인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발생한 혼인상태 변동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기준 여성가족패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혼인상태 변동 여부와 그 원인을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인상태의 변동이 있었던 응답자는 전체 8,364명 중 89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9명의 혼인상태 변동 원인은 초혼이 29명,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년 사이에 사별한 여성이 26명, 29.2%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혼 16명, 18%와 별거 9명 10.1%로 결혼과 사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Ⅲ-8〉 2008년 기준 전체 여성의 혼인상태 변동

(2008년 총: 8364명)

구 분		빈도	유효퍼센트
혼인상태변동여부	있었다	89	1.2
	없었다	7,418	98.8
혼인상태변동원인 (변동여성 총: 89명)	초혼	29	32.6
	재혼	4	4.5
	별거 후 재결합	2	2.2
	이혼 후 재결합	3	3.4
	별거	9	10.1
	이혼	16	18.0
	사별	26	29.2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기혼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상태의 변동과 변동원인을 분석한 결과 2008년을 기준으로 1년 사이에 혼인상태 변동이 있었던 대상자는 전체 6,725명 중 38명, 0.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초혼이 29명,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재혼 4명, 10.5%, 이혼후재결합 3명, 7.9%, 별거후재결합 2명, 5.3% 순으로 나타나 초혼과 재혼이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혼인상태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증후군은 드러나지 않았다.

〈표 Ⅲ-9〉 2008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혼인상태 변동

(2008년 총: 6,725명)

구 분		빈도	유효퍼센트
혼인상태변동여부	있었다	38	.6
	없었다	6,687	99.4
혼인상태변동원인 (변동여성 총: 38명)	초혼	29	76.3
	재혼	4	10.5
	별거 후 재결합	2	5.3
	이혼 후 재결합	3	7.9
	별거	-	-
	이혼	-	-
	사별	-	-

3)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일자리 특성

가) 취업 상태

아래 <표 Ⅲ-10>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취업상태를 ‘부부 모두 일자리 없음’, ‘여성만 일자리 있음’, ‘남편만 일자리 있음’,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보았다. 2007년의 경우,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37.6%, 부부 모두 일자리 없음 9.8%, 여성만 일자리 있음 2.8%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역시 2007년과 취업상태 순위에서는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각각의 범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비해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가 2.5%p 늘어나고,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6.8%p 감소한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각각 0.9%p, 3.2%p 증가하여 경기불황의 단면을 부여주고 있었다.

〈표 Ⅲ-10〉 연도별 부부의 취업 상태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부부 모두 일자리 없음	774	9.8	830	12.3
여성만 일자리 있음	220	2.8	259	3.9
남편만 일자리 있음	3,917	49.8	2,893	43.0
맞벌이부부	2,956	37.6	2,741	40.8
결측값	1	-	2	-

일자리 유무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 소득계층간 부부의 취업상태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월총소득의 25%미만의 집단은 저소득층, 25%이상 75%미만은 중산층, 그리고 75%이상은 고소득층으로 하여 각 집단별로 부부의 취업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아래 교차분석 결과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소득계층간 취업형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990.36(6), p < .001$). 특히 소득계층별 부부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와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가 각각 38.2%와 27.5%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고소득층 집단에서는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와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산층에서는 각각 57.7%, 33.8%로, 고소득층에서는 각각 49.9%와 4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태는 2008년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2008년도는 2007년에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둘 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에서의 남편만일자리가 있는 집단에서의 남편의 은퇴나 퇴직이 부부가 모두 일자리 없는 집단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일자리 유무에 상관없이 자산소득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Ⅲ-11〉 연도별 소득계층간 부부의 취업형태 차이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부부 모두 일자리 없음	364 (27.5)	271 (6.7)	88 (4.1)	723 (9.6)	313 (28.1)	255 (11.7)	249 (7.4)	817 (12.3)
여성만 일자리 있음	115 (8.7)	73 (1.8)	22 (1.0)	210 (2.8)	113 (10.2)	86 (4.0)	58 (1.7)	257 (3.9)
남편만 일자리 있음	341 (25.7)	2,332 (57.7)	1,062 (49.9)	3,735 (49.8)	264 (23.7)	1,060 (48.7)	1,526 (45.6)	2,850 (43.0)
맞벌이 부부	506 (38.2)	1,368 (33.8)	955 (44.9)	2,829 (37.7)	423 (38.0)	775 (35.6)	1,511 (45.2)	2,709 (40.8)
전체	1,326 (100.0)	4,044 (100.0)	2,127 (100.0)	7,497 (100.0)	1,113 (100.0)	2,176 (100.0)	3,344 (100.0)	6,633 (100.0)
$\chi^2 = 990.36$ ($df = 6, p = .000$)					$\chi^2 = 593.97$ ($df = 6, p = .000$)			

나) 일자리 종류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일자리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직종추이를 기술통계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농임업업 숙련 종사자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 종사자 1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9%, 서비스 종사자 14.9%, 단순노무 종사자 12.5%, 사무 종사자 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직종은 남편의 직종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편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각각 23.2%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6.0%, 단순노무 종사자 9.8%, 판매 종사자 4.5%, 서비스 종사자 3.4%, 관리자 2.1%, 군인 1.6% 순이었다. 이처럼 일자리가 있는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경우에는 단순노동이나 판매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은 반면, 남편은 전문직 또는 사무직이나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일자리 종류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기혼유배우자 여성		남편		기혼유배우자 여성		남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관리자	6	.2	83	2.1	10	.3	72	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1	15.9	899	23.2	480	16.1	764	24.1
사무 종사자	287	9.1	871	22.4	266	8.9	703	22.2
서비스 종사자	468	14.9	131	3.4	461	15.5	111	3.5
판매 종사자	566	18.0	176	4.5	501	16.8	129	4.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736	23.4	31	.8	694	23.3	25	.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5	3.7	625	16.1	113	3.8	509	16.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5	2.4	619	16.0	75	2.5	470	14.8
단순노무 종사자	395	12.5	381	9.8	378	12.7	338	10.7
군인	-	-	64	1.6	-	-	49	1.5
결측값	4,719	-	3,988	-	3,747	-	3,555	-

** 남편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한하여 분석되었음.

아래 <표 Ⅲ-13>는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직종을 화이트 컬러 직종과 블루 컬러 직종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본 결과이다. 화이트 컬러 직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사무 종사자를 합한 것이고, 블루 컬러 직종은 그 외의 직종을 모두 합한 것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의 분석 결과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25.2%만이 화이트 컬러에 종사하고, 그 외의 74.8%가 모두 블루 컬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47.8%가 화이트 컬러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혼유배우자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직종은 블루 컬러에 편중되어 있어 직종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3〉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편의 직종 범주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기혼유배우자 여성		남편		기혼유배우자 여성		남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화이트칼라	794	25.2	1,853	47.8	756	25.4	1,539	48.5
블루칼라	2,355	74.8	2,027	52.2	2,222	74.6	1,631	51.5
결측값	4,719	-	3,988	-	3,747	-	3,555	-

추가적으로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취업상황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 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종사상 지위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기준으로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 31.4%, 자영업자 19.1%, 고용주 7.6%, 특수직종 3.1% 순으로 분포되었다. 특히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수당 없이 가족 일에 시간과 노동력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종사상 지위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임금근로자	1,229	38.8	1,194	39.8
고용주	240	7.6	208	6.9
자영업자	605	19.1	560	18.7
무급가족종사자	994	31.4	943	31.4
특수직종	99	3.1	96	3.2
결측값	4,701	-	3,724	-

4) 소득계층별 부부관계 변인의 특성

가) 소득계층별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차이

연도별로 소득계층간의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차이를 보면, 2007년에는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2008년에는 소득계층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중산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소득계층별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차이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평균(SD)	빈도	평균(SD)
저소득층	1,273	3.11(1.00)	1,113	3.25(.94)
중산층	3,967	3.12(1.02)	2,176	3.17(.94)
고소득층	2,076	3.14(1.06)	3,345	3.27(.92)
전체	7,316	3.12(1.03)	6,634	3.24(.93)
	$F = .483 (df = 2)$		$F = 8.60^{***} (df = 2)$	
사후비교분석	-		중산층 < 고소득층, 저소득층	

나) 소득계층별 부부동반활동 정도 차이

2007년과 2008년 모두 소득계층별 부부동반활동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동반활동이 더 잦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2007년과 2008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6〉 소득계층별 부부동반활동 정도의 차이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평균(SD)	빈도	평균(SD)
저소득층	1,228	1.45(.58)	1,025	1.43(.57)
중산층	3,820	1.77(.70)	2,047	1.64(.62)
고소득층	2,002	2.01(.74)	3,167	1.88(.70)
전체	7,050	1.78(.72)	6,239	1.729(.68)
	$F = 248.62^{***} (df = 2)$		$F = 209.03^{***} (df = 2)$	
사후비교분석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다) 소득계층별 가정폭력 경험의 차이

소득계층별 가정폭력 경험 유무의 차이를 본 결과, 소득계층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08년의 경우에는 중산층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저소득층에 비해 0.4%p 가량 높았다.

〈표 Ⅲ-17〉 소득계층별 가정폭력 경험 차이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무경험	유경험	전체	무경험	유경험	전체
저소득층	1,220(91.9)	107(8.1)	1,327(100)	1,052(94.4)	62(5.6)	1,114(100)
중산층	3,764(93.1)	280(6.9)	4,044(100)	2,046(94.0)	130(6.0)	2,176(100)
고소득층	2,011(94.5)	116(5.5)	2,127(100)	3,208(95.9)	137(4.1)	3,345(100)
전체	6,995(93.3)	503(6.7)	7,498(100)	6,306(95.0)	329(5.0)	6,635(100)
$\chi^2 = 9.543 (df = 2, p = .008)$				$\chi^2 = 10.919 (df = 2, p = .004)$		

나.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분석결과

가) 부부관계성

아래의 <표 III-18>는 부부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택한 문항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문항 1은 ‘남편과의 대화를 많이 한다’로 2007년과 2008년 평균이 각각 2.96, 2.92로 ‘대체로 그런 편이다’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문항 2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에 대한 응답에는 연도별로 평균이 2.78, 2.76로 나타났다. 문항 3은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로 연도별로 각각 2.93, 2.88로 ‘대체로 그런편이다’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문항 4 ‘나는 남편을 사랑(신뢰)한다’에 대한 응답에는 연도별로 각각 3.11, 3.10로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성은 2007년과 2008년 평균이 2.94(0.56)와 2.91(0.49)인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성이 4점 척도 기준에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08년이 2007년도에 비해 다소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Ⅲ-18〉 연도별 부부관계성 분석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문항 1. 남편과의 대화를 많이 함						
전혀 그렇지 않음	188	2.4	2.96	120	1.8	2.92
별로 그렇지 않음	1,660	21.1		1,448	21.5	
대체로 그런 편임	4,270	54.4		4,017	59.7	
정말 그러함	1,731	22.1		1,139	16.9	
문항 2.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함						
전혀 그렇지 않음	390	5.0	2.78	282	4.2	2.76
별로 그렇지 않음	1,978	25.2		1,697	25.2	
대체로 그런 편임	4,428	56.4		4,096	60.9	
정말 그러함	1,053	13.4		649	9.7	
문항 3.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함						
전혀 그렇지 않음	176	2.2	2.93	133	2.0	2.88
별로 그렇지 않음	1,273	16.2		1,092	16.2	
대체로 그런 편임	5,284	67.4		4,936	73.4	
정말 그러함	1,112	14.2		563	8.4	
문항 4. 나는 남편을 사랑(신뢰)함						
전혀 그렇지 않음	90	1.1	3.11	69	1.0	3.10
별로 그렇지 않음	843	10.7		492	7.3	
대체로 그런 편임	5,056	64.4		4,862	72.3	
정말 그러함	1,857	23.7		1,301	19.3	
연도별 차이 (T-test)	평균(SD)			평균(SD)		
	2.94(.56)			2.91(.49)		
	t=3.55**, p<01					

나)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표 III-19>는 연도별, 학력별, 소득계층별, 부부의 취업형태별 부부관계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7년과 2008년 모두 기혼 유배우자 여성의 연령별 부부관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성 점수가 높아 관계가 좋은 경향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학력별 부부관계성 역시 2007년과 2008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성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학력에 따른 부부관계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 역시 학력별 부부관계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고학력일수록 부부관계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세 집단간 부부관계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 2007과 2008년 모두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부부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간 부부관계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형태에 따른 부부관계성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의 부부관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부부모두가 일자리가 없는 경우,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부부관계성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19〉 독립변수별 부부관계성 차이 분석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평균(SD)	p값	빈도	평균(SD)	p값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연령별						
10대	1	3.00(-)	.000	-	-	.000
20대	575	3.20(.54)		359	3.11(.44)	
30대	2,811	3.03(.54)		2,277	3.00(.47)	
40대	2,190	2.94(.55)		1,932	2.92(.48)	
50대	1,630	2.80(.56)		1,458	2.79(.51)	
60대	638	2.75(.52)		698	2.76(.52)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학력별						
무학	142	2.66(.57)	.000	132	2.73(.54)	.000
초졸	1,145	2.74(.52)		1,036	2.73(.50)	
중졸	941	2.82(.56)		816	2.81(.48)	
고졸	3,213	2.94(.55)		2,682	2.91(.47)	
대졸	2,267	3.12(.53)		1,932	3.07(.46)	
대학원	135	3.17(.58)		123	3.14(.47)	
남편의 학력별						
무학	105	2.71(.64)	.000	98	2.72(.59)	.000
초졸	796	2.72(.54)		722	2.71(.54)	
중졸	825	2.79(.51)		729	2.76(.48)	
고졸	2,837	2.90(.56)		2,392	2.88(.48)	
대졸	2,924	3.08(.52)		2,486	3.03(.46)	
대학원	332	3.22(.52)		277	3.16(.46)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1,326	2.75(.59)	.000	1,113	2.76(.53)	.000
중산층	4,030	2.95(.54)		2,176	2.88(.49)	
고소득층	2,122	3.05(.55)		3,345	2.99(.46)	
부부의 취업형태별						
부부 모두 일자리 없음	773	2.79(.61)	.000	830	2.82(.54)	.000
여성만 일자리 있음	219	2.62(.59)		259	2.67(.55)	
남편만 일자리 있음	3,908	3.00(.54)		2,893	2.97(.48)	
맞벌이 부부	2,945	2.94(.55)		2,741	2.91(.48)	

다) 부부동반활동정도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부의 동반활동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문항 1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서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에 대한 응답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안한다’라고 응답한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이 2007년에 5,294명 67.5% , 2008년에 4,864명 72.3%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각각 1.50점과 1.40점으로 남편과의 문화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2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에 대한 응답에는 연도별로 각각 4,209명 53.6%, 3,763명 56.0%가 ‘한 달에 한 번도 안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각각 1.93점과 1.88점으로 남편과의 야외활동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3번은 ‘부부가 같이 시부모님과 시댁형제들을 만나기’에 대한 질문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안한다’라고 응답한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이 연도별로 각각 3,478명 46.5%, 2,961명 46.2%가 ‘한 달에 한 번도 안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각각 1.93점과 1.90점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4번은 ‘부부가 같이 친정부모님이나 친정형제들을 만나기’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 역시 ‘한 달에 한 번도 안한다’로, 4,054명 53.3%, 3,479명 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의 부부 동반활동 정도의 평균은 각각 1.77(0.72), 1.73(0.68)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연도별 부부동반활동 세부항목별 평균 점수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문항 1.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						
한달에 한번도 안함	5,294	67.5	1.50	4,864	72.3	1.40
한달에 한번	1,679	21.4		1,293	19.2	
2주에 한번 정도	448	5.7		316	4.7	
일주일에 한번 정도	332	4.2		207	3.1	
일주일에 2번 이상	95	1.2		44	.7	
문항 2.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한달에 한번도 안함	4,209	53.6	1.93	3,763	56.0	1.88
한달에 한번	1,607	20.5		1,324	19.7	
2주에 한번 정도	761	9.7		627	9.3	
일주일에 한번 정도	879	11.2		678	10.1	
일주일에 2번 이상	390	5.0		332	4.9	
문항 3. 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형제들을 만나기						
한달에 한번도 안함	3,478	46.5	1.93	2,961	46.2	1.90
한달에 한번	2,375	31.7		2,154	33.6	
2주에 한번 정도	703	9.4		589	9.2	
일주일에 한번 정도	501	6.7		355	5.5	
일주일에 2번 이상	425	5.7		344	5.4	
문항 4. 부부가 같이 친정부모님이나 친정형제들을 만나기						
한달에 한번도 안함	4,054	53.3	1.78	3,479	53.2	1.73
한달에 한번	2,237	29.4		2,056	31.4	
2주에 한번 정도	579	7.6		499	7.6	
일주일에 한번 정도	424	5.6		288	4.4	
일주일에 2번 이상	313	4.1		223	3.4	
연도별 차이 (T-test)	평균(SD)			평균(SD)		
	1.77(.72)			1.73(.68)		
	t=3.37**, p<01					

라)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혼유배우자 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의 만족도 수준은 ‘남편이 육아를 포함한 집안일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Ⅲ-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7년에는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34.6%, ‘대체로 만족한다’ 33.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8.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역시 이와 동일한 순서로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추이가 나타났다. 연도별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는 다른 변수와는 달리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점수가 더 높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도의 점수는 3.12점, 2008년도의 점수는 3.24점으로 연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Ⅲ-21〉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문항. 남편이 육아를 포함한 집안일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11	8.0	3.12	301	4.5	3.2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381	18.0		1,013	15.1	
보통이다	2,652	34.6		2,624	39.0	
대체로 만족한다	2,532	33.0		2,373	35.3	
매우 만족한다	498	6.5		413	6.1	
연도별 차이 (T-test)	평균(SD)			평균(SD)		
	3.12(1.03)			3.24(.93)		
	t=-6.40***, p<001					

마) 가정폭력경험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가정폭력 경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주일 이상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연도별로 336명

15.3%, 201명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말을 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연도별로 328명, 4.2%, 55명 3.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부딪치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연도별로 94명 1.2%, 55명 3.2%였다.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의 3가지 유형 중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521명 6.6%, 336명 5.0%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6점 척도로 환산하여 가정폭력경험(CTS)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각각 0.58과 0.46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연도별 가정폭력경험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Ⅲ-22〉 가정폭력경험(CTS) 점수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빈도	유효퍼센트	평균
문항 1. 일주일 이상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기						
없음	1,855	84.7	.15	1,543	88.5	.12
있음	336	15.3		201	11.5	
문항 2. 심한 말(폭언, 욕설 등)을 하거나 듣는 것						
없음	1,861	23.7	.30	1,522	87.3	.25
있음	328	4.2		222	12.7	
문항 3. 신체적으로 부딪치는 것						
없음	2,095	26.6	.13	1,689	96.8	.09
있음	94	1.2		55	3.2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전혀 없음	7,347	93.4	-	6,389	95.0	-
해당사항 있음	521	6.6		336	5.0	
CTS 수준	.58			.46		
연도별 차이 (T-test)	평균(SD)			평균(SD)		
	.58(1.30)			.46(1.17)		
	t=2.87**, p<01					

** CTS 수준 = (문항1*1+문항2*2+문항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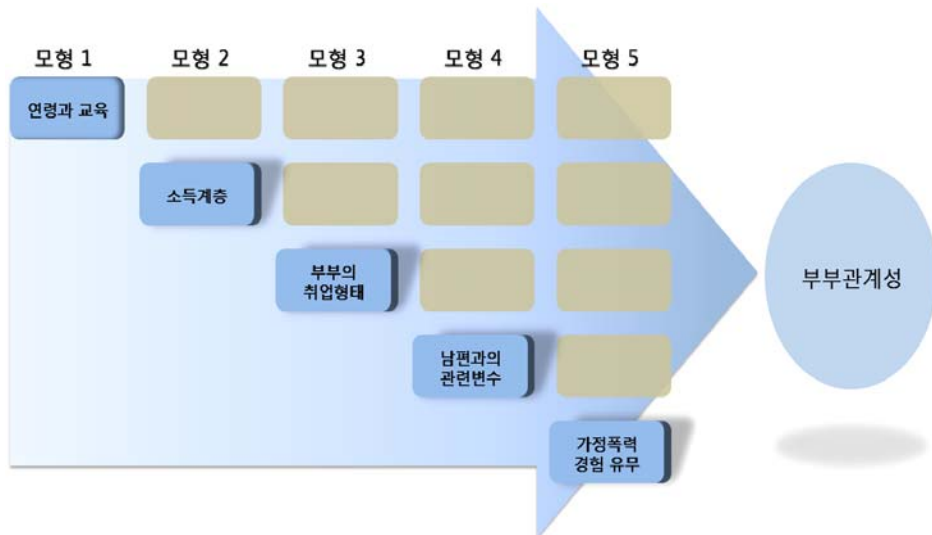
그렇다면, 2007년 대비 2008년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부부관계성이 하

향된 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앞에서 살펴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5개의 모형으로 점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1에서는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연령과 교육연수, 남편 교육연수를 넣어 부부관계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모형 2는 소득계층 더미변수를 추가로 투입, 모형 3은 부부의 취업형태 변수를 투입, 모형 4에서는 남편과의 관련 변수인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변수와 부부 동반활동 정도 변수를 투입했으며, 마지막 완전모형인 모형 5에서는 가정폭력경험 유무 변수를 추가시켜 회귀분석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장점은 점차적으로 변수를 투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Ⅲ-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위계적 회귀분석은 2007년과 2008년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로 두 차례 분석되었으며, 아래의 <표 III-23>, <표 III-24>는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모델 설명력을 보여주는 표이다.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일반적 특성만을 넣은 모형 1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모형 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남편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긍정적 부부관계성을 보였다. 모형 2에서는 소득계층 변수를 추가시켰으며,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부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2007년의 경우 소득계층 변인이 고려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형에 비해 여성의 학력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소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여성의 교육연수와 부부관계성의 인과관계가 아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소득계층 변수에 의한 여성교육의 영향력의 상쇄로 설명될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부부취업형태의 더미변수가 추가되었고, 부부가 모두 일자리가 없는 경우보다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의 부부관계성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전적인 경제적 부담과 이중적인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남편과의 부정적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모형 4에서는 남편과의 관련 변수인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변수와 부부동반활동 정도 변수를 기존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 자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남편과의 관련 변수가 투입됨으로써 부부관계성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기존 모형 3에 비해 연도별로 각각 14.7%p, 13.1%p 증가하였다. 이것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만족도와 부부가 함께 하는 동반활동이 부부의 관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이며, 부부간 동반활동이 잦을수록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기존 독립변수의 유의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편과의 관련 변수가 투입됨으로 인해 소득계층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와 부부간 동반활동이 소득계층 차이의 영향력을 상쇄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계층 간의 부부관계성 차이를 줄이는데 이와 같은 남편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모형 5는 가정폭력 경험 유무 변수를 최종적으로 투입한 완전 모형이다. 모형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경험 유무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모형 설명력은 연도별로 각각 2.8%p, 3.7%p 증가하였다. 최종모형에서의 독립변수들과 부부관계성의 관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인 반면,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부관계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취업형태별로는 부부가 모두 무직인 경우에 비해 남편만 일자리가 있거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의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인 반면,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부부의 동반활동이 잦을수록 부부관계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전무한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집단의 여성들의 부부관계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변수들과 부부관계성과의 인과관계는 2008년도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3〉 위계적 회귀분석: 2007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 (S.E)	B (S.E)	B (S.E)	B (S.E)	B (S.E)
(상수)	2.837(.058)***	2.952***(.063)	2.867***(.069)	2.125***(.066)	2.125***(.066)
연령과 교육					
여성의 연령	-.006(.001)***	-.006(.001)***	-.006(.001)***	-.004(.001)***	-.005(.001)***
여성의 교육연수	.010(.003)**	.007(.003)*	.007(.003)*	.002(.003)	.003(.003)
남편의 교육연수	.021(.003)***	.019(.003)***	.019(.003)***	.012(.003)***	.011(.003)***
소득계층 [준거-고소득층]					
중산층 더미변수		-.061(.015)***	-.057(.015)***	-.042(.014)**	-.038(.014)**
저소득층 더미변수		-.110(.022)***	-.086(.023)***	-.079(.021)**	-.062(.020)**
부부 취업형태 [준거-둘다무직]					
여성만일자리있음			-.130(.043)**	-.121(.040)**	-.126(.039)**
남편만일자리있음			.063(.024)**	.065(.022)**	.062(.021)**
맞벌이부부			.078(.024)**	.084(.022)***	.083(.021)***
남편과의 관련 변수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170(.006)***	.154(.006)***
부부 동반활동 정도				.154(.009)***	.149(.009)***
가정폭력 경험 유무 [준거-무경험자]					-.381(.023)***
R ²	.076	.080	.084	.231***	.259***
F(df)	197.68(3)***	124.81(5)***	82.47(8)***	215.756(10)***	227.466(11)***

*p<.05, **p<.01, ***p<.001

〈표 Ⅲ-24〉 위계적 회귀분석: 2008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 (S.E)	B (S.E)	B (S.E)	B (S.E)	B (S.E)
(상수)	2.806(.055)***	2.887(.057)***	2.792(.062)***	2.067(.062)***	2.184(.061)***
연령과 교육					
여성의 연령	-.005(.001)***	-.005(.001)***	-.004(.001)***	-.002(.001)**	-.003(.001)***
여성의 교육연수	.007(.003)**	.004(.003)	.005(.003)	.002(.003)	.003(.003)
남편의 교육연수	.017(.002)***	.015(.002)***	.015(.002)***	.011(.002)***	.010(.002)***
소득계층 [준거-고소득층]					
중산층 더미변수		-.062(.014)***	-.056(.014)***	-.021(.013)	-.017(.013)
저소득층 더미변수		-.075(.020)***	-.053(.020)**	-.052(.019)**	-.042(.018)*
부부 취업형태 [준거-둘다무직]					
여성만일자리있음			-.121(.035)**	-.105(.033)**	-.091(.032)**
남편만일자리있음			.071(.020)***	.061(.019)**	.060(.018)**
맞벌이부부			.060(.020)**	.056(.019)**	.054(.018)**
남편과의 관련 변수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153(.006)***	.137(.006)***
부부 동반활동 정도				.142(.009)***	.136(.009)***
가정폭력 경험 유무 [준거-무경험자]					-.441(.025)***
R ²	.069	.073	.079	.210***	.247
F(df)	155.81(3)***	99.06(5)***	67.52(8)***	167.362(10)***	187.85(11)***

*p<.05, **p<.01, ***p<.001

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 분석

1) 결혼만족도 비교

가) 결혼만족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관계성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부간의 역동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원인의 추이와 집단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을 ‘매우 불행하다(1점)’에서부터 ‘매우 행복하다(7점)’의 범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2차 경제위기 당시 부부의 취업상태별 결혼만족도 차이와 소득계층별 결혼만족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요인과 여성의 결혼만족도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7년과 2008년의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2007년과 2008년 모두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매우 불행하다’(1점 또는 2점)로 응답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매우 행복하다’(6점 또는 7점)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6%p, 7.3%p 감소하였다.

〈표 Ⅲ-25〉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1=매우불행	41	.5	32	.5
2	108	1.4	97	1.4
3	335	4.3	409	6.1
4	1,732	22.0	1,866	27.8
5	2,259	28.8	2,294	34.1
6	2,263	28.8	1,559	23.2
7=매우행복	1,117	14.2	467	6.9
결측값	13	-	1	-

나) 부부의 취업상태별 결혼만족도 비교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부부의 취업상태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 모두 일자리가 없는 집단,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 그리고 맞벌이 부부 집단으로 나누어 4집단간의 결혼만족도 차이를 검증하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2007년과 2008년 모두 집단간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비교분석(Scheffé)을 통해 남편만 취업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집단, 부부모두 일자리가 없는 집단, 여성만 취업한 집단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맞벌이부부 집단과 남편만 취업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그 외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나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표 Ⅲ-26〉 연도별 부부의 취업상태별 결혼만족도 비교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평균(SD)	빈도	평균(SD)
부부모두일자리없음	774	4.84(1.26)	830	4.69(1.19)
여성만일자리있음	219	4.48(1.20)	259	4.34(1.10)
남편만일자리있음	3,910	5.36(1.15)	2,893	5.03(1.10)
맞벌이부부	2,952	5.14(1.17)	2,741	4.90(1.06)
전체	7,855	5.20(1.19)	6,723	4.91(1.11)
	$F = 79.697^{***} (df = 3)$		$F = 47.262^{***} (df = 3)$	
사후비교분석	여성만취업<둘다무직<맞벌이부부 < 남편만취업		여성만취업<둘다무직 < 맞벌이부부, 남편만취업	

다)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 비교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 모두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경제적 요인이 여성의 주관적인 결혼만족도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남편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적인 직종에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정성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이면서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Ⅲ-27〉 연도별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

(2007년 총: 7,868명, 2008년 총: 6,725명/ 100%)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빈도	평균(SD)	빈도	평균(SD)
저소득층	1,326	4.78(1.25)	1,113	4.57(1.16)
중산층	4,035	5.22(1.15)	2,176	4.83(1.12)
고소득층	2,126	5.46(1.13)	3,345	5.07(1.04)
전체	7,487	5.21(1.19)	6,634	4.91(1.10)
	$F=141.757^{***} (df=2)$		$F=98.255^{***} (df=2)$	
사후비교분석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2) 부부갈등의 원인 비교

가) 부부갈등원인

총 8가지 범주의 부부갈등 문제 중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이 선정한 부부갈등 원인의 1순위는 경제적 문제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이 갈등 원인의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위별 가중치를 반영한 총합을 고려하여도, 다른 부부갈등 원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총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부부관계성에 있어서의 경제적 문제가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녀교육문제, 시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 가사분담,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및 친구관계, 그리고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순으로 부부갈등 원인의 순위가 매겨졌다. 이와 같은 부부갈등순위는 2007년과 2008년에 변동 없이 동일한 양태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2007년 기준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갈등의 원인

(2007년 총: 7,868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총합	가중치 반영된 순위
경제적인 문제	788	277	129	3,047	1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695	372	190	3,019	2
자녀교육 문제	366	319	139	1,875	3
시부모님과의 관계	176	151	89	919	4
부부간 가사분담	79	97	87	518	5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56	67	68	370	6
본인 또는 남편의 친구관계	24	40	46	198	7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11	15	16	79	8

** 2008년도 순위변동 없었음.

** 총합=(1순위*3)+(2순위*2)+(3순위*1)

나) 소득계층간 부부갈등의 원인 1순위 비교

소득계층간 부부갈등의 원인 1순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소득계층별 부부갈등 원인의 1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절반이 넘는 58.2%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부부갈등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집단에서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전체 35.9%)보다 1.5배나 심각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보다는 본인이나 남편의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과 같은 생활습관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각 원인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부부갈등 원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Ⅲ-29〉 2007년 기준 소득계층별 부부갈등 1순위 차이 교차분석

(2007년 총: 7,868명/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경제적문제	205 (58.2)	420 (35.2)	134 (23.6)	759 (35.9)
자녀교육	22 (6.3)	209 (17.5)	128 (22.5)	359 (17.0)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관계	17 (4.8)	104 (8.7)	57 (10.0)	178 (8.4)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 및 친구관계	15 (4.3)	38 (3.2)	24 (4.2)	77 (3.6)
부부간 가사분담	4 (1.1)	39 (3.3)	32 (5.6)	75 (3.6)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89 (25.3)	382 (32.0)	193 (34.0)	664 (31.4)
전체	352 (100.0)	1192 (100.0)	568 (100.0)	2112 (100.0)
$\chi^2 = 134.71^{***} (df = 10)$				

** 기존의 총8개의 부부갈등원인 범주에서 '시부모님과의 관계'와 '친정부모님과의 관계'를 합하고, '본인또는남편의 직장생활'과 '본인또는남편의친구관계'를 합하여 분석하였음.

다) 연령별 부부갈등 1순위 비교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 원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문제가 가장 큰 부부갈등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문제가 부부갈등의 원인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 별로 부부갈등의 원인의 순위가 조금씩 다른 게 나타나고 있는데, 20대는 시부모 및 친정 부모님과과의 관계와 부부간의 가사분담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결혼 초반에 요구되는 가족문화의 적응과 역할 분담의 문제가 부부갈등의 원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50대의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은 부부간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 보다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부부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교육과 양육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60대의 경우에는 본인과 남편의 직장이나 친구관계로 인한 갈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부부갈등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0〉 2007년 기준 연령별 부부갈등 1순위 차이 비교

(2007년 총: 7,868명/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경제적문제	65 (34.4)	289 (31.0)	226 (35.5)	149 (44.9)	59 (56.7)	788 (35.9)
자녀교육	15 (7.9)	174 (18.6)	148 (23.2)	27 (8.1)	2 (1.9)	366 (16.7)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관계	30 (15.9)	94 (10.1)	47 (7.4)	13 (3.9)	3 (2.9)	187 (8.5)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 및 친구 관계	4 (2.1)	39 (4.2)	20 (3.1)	12 (3.6)	5 (4.8)	80 (3.6)
부부간 가사분담	17 (9.0)	50 (5.4)	7 (1.1)	4 (1.2)	1 (1.0)	79 (3.6)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58 (30.7)	287 (30.8)	189 (29.7)	127 (38.3)	34 (32.7)	695 (31.7)
전체	189 (100.0)	933 (100.0)	637 (100.0)	332 (100.0)	104 (100.0)	2195 (100.0)

$\chi^2 = 159.75^{***} \quad (df = 20)$

라) 취업상태별 부부갈등 1순위 비교

아래 <표 Ⅲ-31>는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갈등 1순위의 차이를 분석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통해, 남편만 취업한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부부갈등 1순위는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만 취업한 집단에서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의 비중은 66.7%로 전체 비율(35.9%)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취업상태별 소득계층의 분포 결과에서 중·고소득층 집단에서 남편만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남편만 취업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상대적으로 여성만 취업한 비율이 높았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눈여겨볼만한 수치로는 여성만 취업한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교육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원만한 의견 조율의 결과로 해석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부의 관심이나 지도감독이 매우 적거나 다른 문제에 비해 중요치 않게 다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Ⅲ-31> 2007년 기준 취업상태별 부부갈등 1순위 차이 교차분석

(2007년 총: 7,868명/ 명(%))

구분	둘다무직	여성만취업	남편만취업	맞벌이부부	전체
경제적문제	115 (54.5)	44 (66.7)	342 (30.2)	287 (36.5)	788 (35.9)
자녀교육	18 (8.5)	4 (6.1)	211 (18.6)	133 (16.9)	366 (16.7)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관계	10 (4.7)	2 (3.0)	121 (10.7)	54 (6.9)	187 (8.5)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 및 친구관계	10 (4.7)	2 (3.0)	44 (3.9)	24 (3.1)	80 (3.6)
부부간 가사분담	2 (.9)	0 (.0)	40 (3.5)	37 (4.7)	79 (3.6)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56 (26.5)	14 (21.2)	374 (33.0)	251 (31.9)	695 (31.7)
전체	211 (100.0)	66 (100.0)	1132 (100.0)	786 (100.0)	2195 (100.0)
$\chi^2 = 93.78$ ($df = 15, p = .000$)					

3) 부부갈등순위별 결혼만족도의 차이

기존의 분석을 토대로, 부부갈등원인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간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은 부부갈등의 원인 1순위에서 나온 원인별로 6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부부갈등원인 1순위 집단별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비교분석(Scheffé) 결과, 경제적 문제를 부부갈등원인 1순위로 뽑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2〉 2007년 기준 부부갈등순위별 결혼만족도 비교

(2007년 총: 7,868명/ 명(%))

	빈도	평균(SD)
경제적문제	788	4.47(1.23)
자녀교육	366	5.30(1.11)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관계	187	5.01(1.35)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 및 친구 관계	80	4.74(1.47)
부부간 가사분담	79	5.13(1.19)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695	4.79(1.24)
전체	2,195	4.79(1.27)
	$F = 25.716^{***} (df = 5)$	
사후비교분석	경제적문제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 및 친구관계,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관계, 부부간 가사분담, 자녀교육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소득계층별 부부관계성의 분석을 통해 본 취약계층의 부부관계성 실태파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일자리 유무 변인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도별로 소득계층별 부부간 취업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와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가 각각 38.2%와 2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태는 2008년도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2008년도는 2007년에 비해 저소득층에서의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증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한 소득계층간 분석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는 계층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2008년에는 소득계층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의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편의 공동참여가 중산층 부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직접적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 가족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모두 소득계층별 부부동반활동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동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가정폭력 경험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08년의 경우에는 중산층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저소득층에 비해 0.4%p 가량 높았다. 이는 가정폭력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와 계층과 관계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의 부부관계성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도, 2008년도 모두, 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인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부관계성은 고소득층에 비

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취업형태별로는 부부가 모두 무직인 경우에 비해 남편만 일자리가 있거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의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인 반면,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부부의 동반활동이 잦을수록 부부관계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전무한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집단의 여성들의 부부관계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부부의 취업상태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 모두 일자리가 없는 집단,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집단, 그리고 맞벌이 부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2차년도 모두 남편만 취업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집단, 부부모두일자리가 없는 집단, 여성만 취업한 집단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나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저소득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여성의 주관적인 결혼만족도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남편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적인 직종에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정성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이면서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부부갈등 문제 중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이 선정한 부부갈등 원인의 1순위는 경제적 문제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이 갈등 원인의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부갈등순위는 2007년과 2008년에 변동 없이 동일한 양태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과반수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부부갈등 원인으로 응

답하였으며, 이는 전체집단에서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전체 35.9%)보다 1.5배나 심각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보다는 본인이나 남편의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과 같은 생활습관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각 원인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부부갈등 원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갈등 1순위는 남편만 취업한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부부갈등 1순위는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만 취업한 집단에서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의 비중은 66.7%로 전체 비율(35.9%)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취업상태별 소득계층의 분포 결과에서 중·고소득층 집단에서 남편만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남편만 취업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상대적으로 여성만 취업한 비율이 높았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여성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며, 이는 남성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 취업을 하고 남편의 실직인 경우 부부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실을 감안해 보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이 사회의 경제구조가 여성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남편과의 부부동반 활동도 자주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에의 경험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3.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분석

가.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현황

본 장에서는 경제위기 하에서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족적 위험으로 가족관계 및 가정폭력에 집중하여 안전망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던 분석 변수로서 가족간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부부동반활동, 역할분담, 가정폭력을 대상

으로 하여 설계된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 방지정책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전망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체계는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2010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사회복지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2월 기준 전국에 41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적인 측면에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33〉 유형별 사회복지관 수

구분	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¹⁾
2000	348	251	62	18	15	2
2001	350	253	62	18	15	2
2002	360	260	64	17	19	-
2003	369	268	65	17	19	-
2004	379	274	65	18	22	-
2005	391	289	58	22	22	-
2006	397	289	62	24	22	-
2007	408	298	61	26	23	-
2008	414	298	62	26	28	-

주: 1) 현재 건축 중이며,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기관

출처: 2009년 보건복지가족 통계연보 재구성

가족복지사업은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 사업, 자활사업과 함께 사회복지관의 5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부양가족 지원이 있다.

5개의 단위사업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가족관계증진”사업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이며, “가족기능보완”사업은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은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 정의되며 “부양가족지원”사업은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을 말한다.

〈표 Ⅲ-34〉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단위사업	내용	세부내용
가족관계 증진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 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가족기능 보완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상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가정문제 해결·치료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학대: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부양가족 지원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 사업

출처: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재구성

2) 건강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가족돌봄사업·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활동 등 예방적·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발굴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이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크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나뉘는데 그 개소수가 2004년 3개에서 2010년 현재 139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 센터 종사자 교육, 지방센터 사업운영 지원 및 평가, 가족관련 정보제공 및 전국단위 가족문화운동 전개의 역할을,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3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3	16	50	66	83	98	139
중앙센터			1	1	1	1	1	1
지방 센터	계	3	15	49	65	82	97	138
	국비	3	6	20	33	38	54	100
	전액지방비		9	29	32	44	43	38

출처: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2.jsp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으로는 공통필수사업, 선택사업으로 나뉘고 각각의 사업에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스,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구분된다.

“가족교육”은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노년기 생활교육, 아버지 교육 중 택일), 예비부부/신혼기부부 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가정경영아카데미 제목 통일, 동일대상 10회기 이상 실시) 등이, “가족상담”은 부부 및 가족관계 갈등, 이혼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담이며, “가족친화문화조성”으로는 가족봉사단운영과 아버지학교가 필수사업으로, 선택사업으로는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체험 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가족봉사단 축제 등 비교적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는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사업으로 동일 가족유형 대상, 총1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10회기 이상 진행되며 “지역사회 연계”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및 중앙 협약기관과의 연계 등이 있다.

〈표 Ⅲ-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공통 필수 사업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노년기 생활교육, 아버지 교육 중 택일), 예비부부/신혼기부부 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가정경영아카데미 제목 통일, 동일대상 10회기 이상 실시)
	가족상담	- 가족상담(부부 및 가족관계 갈등 상담 등), 이혼전후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봉사단운영, 아버지학교(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포함)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공동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놀토·임시휴교·방학 중 가족돌봄 지원사업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사업(동일 가족유형 대상, 총 1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10회기 이상 진행)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교육협의체, 민관협의체 참여도 등 인정) 및 연계사업

구분	프로그램	내용
선택 사업	가족교육	-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 자녀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등 기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상담	- 부부상담, 아동청소년문제상담, 가족위기상담, 자녀 문제상담, 상담봉사자 양성 등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가족봉사단 축제, 지역내 이웃간의 나누기, 돕기가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가족생활문화개선 캠페인, 지역 축제 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가족봉사단 멘토 멘티, 가정봉사원 파견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 중앙 협약기관과의 연계(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 센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출처: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2.jsp

3) 가정폭력방지정책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이다. 법률 제정 이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전달체계로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10차 개정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이 보강되었다.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으며, 여성폭력 방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까지 포함된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의 연계의 업무를 수행하며 2009년 12월 기준 전국에 27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 혹은 동반아동에게 6개월에서 2년까지 무료숙박제공, 신체적·정신적 안정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09년 12월 기준 전국에 6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Ⅲ-37〉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현황

(‘09.12.31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75(3)	32	10	11(1)	13	13(1)	5	8	60(1)	10	12	20	17	17	26	16	5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

출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Ⅲ-3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입소정원

(‘09.12.31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가정폭력 보호시설	66	13	3	2	1	4	1	1	10	5	3	5	4	4	2	6	2
입소정원	1,132	198	80	20	17	98	30	20	134	62	70	58	64	75	35	121	50

*장애인시설 - 서울1(15명)

*중장기시설 - 서울1(10명), 경기1(10명), 광주1(31명), 부산1(20명)

출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전달체계로서 제공하는 상담 및 자원연계 서비스 이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차원의 사업이 있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은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대상으로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다.

〈표 Ⅲ-39〉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종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개별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위기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 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1시간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 폭력순환 고찰 -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최소4인이상 - 주1~2회(1회 2시간 30분~3시간)
심신회복 캠프 (1박2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참여 가능 - 건강한 가정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10명내외 (자녀별도) - 1박2일
동반자녀 심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 - 놀이지도치료 -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2회(1회 50분)
아동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 문제 -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 - 분노조절 - 자존감 향상 -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10인내외 - 주1~2회(1회 90분이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 	전체회기의 20%범위 내에서 필요시 활용

출처: 2010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재구성

이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제공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무료번호, 법률상담, 법률계몽사업(생활법률 강연

및 이동법률 상담, 무료 대서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 및 사회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을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입주보증금(호당 600만원) 지원 및 자립지원 상담원을 배치(임대주택 10호당 1명)하고 2009년 기준 총 54호 79가구에 196명이 생활하고 있다. 직업훈련 지원은 이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한 자이면서 직업교육을 희망한 자에게 직접교육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디자인, 컴퓨터 관련 실질적 취업·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우선 지원이다. 1인당 월 40만원, 교육훈련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4) 소결: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 건강가정지원사업 · 가정폭력방지정책 비교분석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각 항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Ⅲ-40>와 같다.

〈표 Ⅲ-40〉 가족안전망 관련 정책 현황 정리

구분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
목적 · 목표	가족기능 강화, 사회문제 예방,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기본방향: 경기침체에 따른 가족돌봄사업·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활동 등 예방적·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발굴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 * 우선사업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②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③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④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⑤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다양한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아동
급여	* 프로그램 제공 - 가족관계 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 지원	* 프로그램 제공 - 가족교육 - 가족상담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무료숙박제공(6-24개월) - 신체적·정신적 안정지원 -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전달 체계	사회복지관(전국41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139개)	가정폭력상담소(전국278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전국66개)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공통점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의 지향성과 체계 및 수행방법에 따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이념적으로 비교적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과 가정폭력방지정책은 사후치료적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정책목표 및 대상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①부터 ⑤까지의 우선사업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빈곤층이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이 사업의 주요대상이 된다.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 다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반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목표 설정과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예방적·선제적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적 성격과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과 가정폭력방지정책에 비해 통합적 차원에서 가족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노인 등의 개별대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가족적 관점을 더하는 식의 프로그램 설계를 해왔다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가족”을 밑바탕으로 하여 “가족관계 증진”이 목적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관이 가족사업 이외에도 기타 많은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건강가정지원사업과 가정폭력방지사업이 가족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하나의 차이일 수 있겠다.

접근성 차원에서는 사회복지관 414개,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278개와 6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139개로 사회복지관의 접근성 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정부정책으로 흡수된 지도 가장 오래되어 사업의 표준화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있지만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경우 비교적 정

부 정책화된 시간이 짧아 개소수도 적고 사업의 표준화 정도도 낮은 편으로 시설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정책제언

1) 안전망으로서 문제점

가) 정책대상으로서 “가족” 개념의 모호성과 제한적 적용범위

취약계층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 개별대상으로서 우선 분류된 이후 그 개별대상의 가족으로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상당수이다. 장애인가족,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빈곤가족 등 단위사업을 중심에 두고 “가족”을 부수적으로 엮는 형식이었다. 그렇게 과거 사회복지의 가구원 개별에 대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최근 들어 여러 차원의 가족변화가 주목되면서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가족”, “가족관계 및 역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가족관계 안전망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과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은 이러한 관점이 일정부분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정책이 가족관계 안전망으로서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가? 안전망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 전제한다면 이들 정책이 가족관계 안전망으로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족”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경우 가정폭력이라는 극한 상황 하에 있는 “피해자와 동반아동”을 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가해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은 우선사업대상으로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②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③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④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⑤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대상별·주제별 단위사업에 가족을 엮은 정도이다. 게다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족에 대한 접근은 빈곤층 중심의 문제중심적 패러다임을 주로 하여(김인숙, 2005) 사회복지관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상당수이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부재하다. 사회복지의 “치료”, 가정학의 “예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정부와 의회에 설득력을 과시하였던 것을(김인숙, 2005) 감안해 본다면 더욱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정책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은 가정폭력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책대상이 명확하나, 가정폭력이 기존 아내폭력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 노인학대, 아내학대 등을 포괄하는 안전망으로서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약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해서 보편적 포괄로 보기 어렵다.

나) 분절적 전달체계: 부처의 이원화 문제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을 포함하여 그 외에 가족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사업 대부분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안전망으로서의 이들 정책을 관리·규제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 부처로 나뉘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된다.

전달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지원·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데 규제·지원·감독의 역할이 두 군데로 나뉘다보니 네트워크의 효과성 미흡 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이원규·김재일, 2007). 실제로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부처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도 구분되는 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가족 관련 업무가 통합되지 못한 채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나아가 전달체계의 이원화 문제는 정책 전체의 방향성의 미정립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지금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기체로서의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대응하는데 있어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은 노동, 문화, 보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 이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여 중복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짐작컨대 정책의 성과가 있을 때에는 이 두 부처는 서로가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할 때에는 서로에게 그 과오를 떠넘기기기 식의 행태가 연출될 수 있다.

다)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접근성 문제

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는 관련법 제정 이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개소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민간차원의 서비스들은 안정적으로 물적 자원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보강, 체계화된 서비스들이 공적 차원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소수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수십 명을 기다려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취약계층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접근성 문제는 단지 시설 개소 수 규모 그 자체의 영역을 넘어 지역별 시설 설치의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한다. 시설의 지역적 편중 분포의 문제는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관련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면서 생긴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시설별·대상별 서비스의 편차까지도 일으킨다(변화순 외, 2009). 가정폭력과 같은 긴급 욕구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2) 정책제언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이 취약 계층의 가족 및 가족관계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몇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위 “저소득층 중 문제 있는 가정”은 정상가족에 대응한 비정상가족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가족 변화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 “유기체로서의 가족” 역시 구체적으로 개념정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 정의 작업은 구체화하되, 체계를 나누어 각 정책사업의 수준으로 재정리되어야 하겠다.

둘째,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접근성 확대와 관련하여 이용자 수, 교통, 시설유형 등을 고려해 적정 개소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수행체계로서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개소 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대기자 리스트에 올려지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도 상당수가 도시에 몰려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족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이며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의 격차의 문제도 심각하다.

셋째,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에도 민간자원과의 연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급체계의 중심인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협의체 구성하는 단순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지역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넷째, 가족관계에 있어 위험과 실질적인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보인다.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유형에 따른 분류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 내에서도 가족활동, 가족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망 등의 다차원적인 욕구조사가 실시되어 프로그램 개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IV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 관련 패널 조사분석

1. 조사개요	101
2. 조사결과	108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안전망 분석 및 개선방안	128

1.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빈곤이 자녀세대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 자녀들의 빈곤탈피를 위한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취약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의 세대이전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로 사용한 중·고등학교시절의 학업성적을 이후 자녀세대의 빈곤이전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지표적 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사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적은 대학진학으로 직결되고 우리와 같은 학력중시사회에서는 학력이 계층상승에 다른 어떤 요인보다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여전하므로 학업성적, 학력이 주는 혜택은 우리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줄어들 줄 모르는 사교육비 규모에서 입증되며 늘어가는 사교육비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미치는 부담감과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빈곤의 세대이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빈곤의 세대이전과 관련하여 학업성적뿐 아니라 우리사회도 소득양극화로 인한 지역분리, 지역 내 분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지역과의 연관성도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이전보다는 빈곤탈피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전과 자립을 동시에 보기위해 학업성적뿐 아니라 빈곤탈피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변수로 진로성숙도, 자아안정감(자기신뢰도, 자기통제력, 자존감)을 설정했다. 학업성적이 낮다고 해도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자신의 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빈곤에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는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빈곤탈피에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빈곤탈피와 관련하여 가정환경(부모의 자녀감독, 자녀에 대한 애착, 가정내 폭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가정환경이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자아안정감(자기신뢰도, 자기통제력,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방안과 연관시키고자 했다.

가.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⁷⁾ 패널조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3년 당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선정된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으로, 매년 한 차례씩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조사에 응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1,725명과 여자 1,724명으로 남녀의 성비는 약 50%로 나타났으며,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88년생 이하는 7명(0.2%), 89년생은 2,699명(78%), 90년생은 743명(22%)으로 대부분 89년에서 90년 사이에 태어났다.

나.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전형적인 종단적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년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3,449명을 추출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일대일 면접을 통한 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후 6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에 추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그중에서 2003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즉 연구 대상자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주요변수의 측정 및 실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빈곤이다. 빈곤의 분류는 각 해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 원 단위)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2 시점에서 고3 시점까지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표준편차는 <표 IV-1>과 같다.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은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부

7)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 지위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 수준도 동반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월 평균 소득의 백분위수를 보면 하위 25%에 속하는 경우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선으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가한 243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월 평균소득은 2003년에는 350만원 선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4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백분위수를 바탕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그리고 2007년에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43만원 미만인 가구를 빈곤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50만원 이상인 가구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4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상류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빈곤 계층과 상류 계층 중간에 위치한 가구들을 중류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경제적 계층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IV-2>와 같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연도에 따라 빈곤계층은 약 15~23%였으며, 상류층은 약 24~33%였다.

〈표 IV-1〉 각 연도별 가구별 월 평균 소득

(단위: 만원)

연도(학년)	2003(중2)	2004(중3)	2005(고1)	2006(고2)	2007(고3)
평균	299.73	299.72	311.31	322.53	336.58
표준편차	216.90	183.06	183.03	182.51	160.86
백분위수 25	200.00	200.00	200.00	200.00	242.50
50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75	350.00	400.00	400.00	400.00	400.00
N(명)	3,241	2,970	3,000	2,989	2,624

한편, 빈곤의 지속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곤 유형을 지속 빈곤, 일시 빈곤, 비빈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속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매해 연속 하위 25% 미만이었던 이들이며, 일시 빈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해 이상 다섯 해 미만에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하위 25% 미만이었던 이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한 번도 하위 25% 미만인 경우가 없었던 이들은 비빈곤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599가구 중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이들은 약 4%(88가구)였으며, 일시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는 약 40%(849가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한 번도 하위 25%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빈곤 가구는 약 55.8%(1,182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이처럼 빈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정의하는 빈곤이 표본 내에서의 상대적 빈곤을 의미하고, 한 번이라도 무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37%임을 고려한다면, 빈곤 경향에 대한 비율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 각 연도별 경제계층 빈도 및 비율

(단위: 명(%))

연도(학년)	2003(중2)	2004(중3)	2005(고1)	2006(고2)	2007(고3)
빈곤	714(22.0)	613(19.8)	509(16.5)	473(15.3)	656(22.2)
중	1,587(49.0)	1,591(51.5)	1,644(53.4)	1,587(51.3)	1,018(34.5)
상	940(29.0)	766(24.8)	847(27.5)	929(30.0)	950(32.2)
계	3,241(100.0)	3,092(100.0)	3,081(100.0)	3,093(100.0)	2,950(100.0)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정 내 빈곤이 청소년들의 성인기 경제적 자립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청소년들이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 갖게 될 경제적 자립 능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로 설정하였다. 이들의 성인기 경제적 자립 능력 관련 변인을 경제적 자립준비도로 보고 경제적 자립준비도에는 진로 및 직업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학업성적과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자립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변인으로 정서적 안정의 정도를 포함하였다. 정서적 안정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존감, 자기통제력, 자기신뢰도를 하위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가정의 빈곤은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 내 양육환경

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빈곤이 가정 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 내 양육환경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정 내 양육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애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가정 내 폭력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빈곤계층 청소년들은 주변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거주지 환경은 이들의 자립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빈곤이 거주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단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조사는 4차년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분석은 4차년도와 5차년도에만 한해 실시했다. 각 변인과 관련된 문항들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각 변인별 문항

변인		문항
진로 성숙도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학업성적		지난 학기 전교 등수 비율
정서적 안정도	자아 통제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R)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R)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R) 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R) 5.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R) 6.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R)

변인			문항
	자기 신뢰도		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자존감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R)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R)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R)
가정 환경	부모 애착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 감독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가정 폭력	부부 폭력	1.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2.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자녀 학대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4.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거주지역 환경			1. 동네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2. 우리 동네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3.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4.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5. 우리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R: 역계산 문항			

각 변수의 평균 및 비율, 그리고 Cronbach's α 값은 <표 IV-4>와 같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모든 변인에서 .65~.90 사이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4> 각 변수별 기술통계치

연도(학년)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 비율				
		2003(중2)	2004(중3)	2005(고1)	2006(고2)	2007(고3)
진로성숙도	7~35	15.48(4.67) $\alpha=.68$	15.93(4.94) $\alpha=.77$	15.82(4.75) $\alpha=.78$	16.11(4.98) $\alpha=.81$	15.32(5.25) $\alpha=.85$
학업성적	1~100	41.74(27.16)	39.41(26.58)	36.67(24.94)	38.21(24.11)	37.02(24.51)
자기통제	6~30	19.95(4.04) $\alpha=.65$	19.76(4.10) $\alpha=.69$	20.08(4.01) $\alpha=.69$	20.15(3.93) $\alpha=.68$	20.07(3.96) $\alpha=.69$
자기신뢰도	3~15	10.39(2.21) $\alpha=.83$	10.42(2.23) $\alpha=.86$	10.56(2.10) $\alpha=.86$	10.71(2.09) $\alpha=.85$	10.98(2.09) $\alpha=.87$
자존감	6~30	18.98(3.74) $\alpha=.73$	19.60(3.77) $\alpha=.74$	19.91(3.62) $\alpha=.75$	20.02(3.67) $\alpha=.76$	20.53(3.69) $\alpha=.76$
부모애착	6~30	20.04(4.67) $\alpha=.86$	20.50(4.55) $\alpha=.88$	20.61(4.35) $\alpha=.88$	20.75(4.51) $\alpha=.90$	21.09(4.61) $\alpha=.90$
부모감독	4~20	12.89(3.47) $\alpha=.85$	13.48(3.35) $\alpha=.87$	13.51(3.34) $\alpha=.88$	13.68(3.27) $\alpha=.88$	13.80(3.38) $\alpha=.89$
가정폭력	4~20	7.16(3.16) $\alpha=.78$	7.33(3.43) $\alpha=.86$	6.75(2.76) $\alpha=.80$	6.86(3.03) $\alpha=.86$	6.78(3.07) $\alpha=.87$
거주지 환경					2.33(.90) $\alpha=.75$	2.27(.97) $\alpha=.78$

2. 조사결과

가. 연도별 소득계층과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진로 준비도간의 관계

각 연도별 소득계층과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계층과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

각 연도별 소득계층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계층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가정환경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표 IV-5>).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서 빈곤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애착 및 감독 수준이 낮고 가정 폭력의 정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2차년도 역시 빈곤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청소년들에 비해 감독 수준이 낮고 가정 폭력의 정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애착과 관련해서는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부모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서는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부모애착 및 감독수준 정도가 높아졌으며, 가정 폭력의 수준은 낮아졌다. 4차년도에서는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부모애착은 높아진 반면 가정 폭력의 수준은 낮아졌으며 부모감독은 상류층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에서는 부모애착의 경우, 상류층 청소년집단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았고, 부모감독은 상류층과 빈곤층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정폭력의 수준은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당해년도의 빈곤경험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정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중류층이나 상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정도가 낮은 반면 가정폭력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차년도 자료에서 거주지역환경의 열악함 정도를 보면 4차년도에서는 빈곤층의 거주지역 환경이 상류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열악하였으며, 5차년도에서는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열악함의 정도가 높아졌다. 이 역시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5〉 소득계층별 가정환경 평균(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연도	변인	소득계층별 평균(표준편차)			ANOVA		
		상	중	하	df	F	sheffé*
1차	부모애착	20.55(4.82)	20.14(4.49)	19.27(4.75)	2, 3235	15.913**	상, 중>하
	부모감독	13.20(3.60)	13.00(3.32)	12.32(3.57)	2, 3237	13.87**	상, 중>하
	가정폭력	6.95(3.16)	7.01(3.03)	7.72(3.38)	2, 3232	15.09**	상, 중<하
2차	부모애착	21.08(4.54)	20.65(4.43)	19.64(4.64)	2, 2956	18.18**	상>중>하
	부모감독	13.77(3.53)	13.58(3.25)	13.05(3.31)	2, 2966	8.52**	상,중>하
	가정폭력	7.11(3.45)	7.19(3.38)	7.78(3.47)	2, 2951	7.87**	상,중<하
3차	부모애착	21.11(4.45)	20.67(4.22)	19.70(4.41)	2, 2990	17.08**	상>중>하
	부모감독	13.86(3.41)	13.59(3.20)	12.78(3.44)	2, 2996	17.55**	상>중>하
	가정폭력	6.47(2.61)	6.71(2.75)	7.30(2.96)	2, 2996	14.71**	상<중<하
4차	부모애착	21.48(4.29)	20.58(4.53)	19.99(4.62)	2, 2970	20.12**	상>중>하
	부모감독	14.00(3.20)	13.60(3.27)	13.30(3.27)	2, 2970	8.20**	상>중, 하
	가정폭력	6.61(2.92)	6.86(3.05)	7.38(3.14)	2, 2970	10.14**	상<중<하
	거주지역 환경	11.36(3.38)	11.69(3.34)	12.11(3.26)	2, 2971	7.90**	상<하
5차	부모애착	21.49(4.70)	21.02(4.56)	20.60(4.52)	2, 2592	7.22**	상>중, 하
	부모감독	14.01(3.49)	13.77(3.26)	13.57(3.43)	2, 2592	3.42**	상>하
	가정폭력	6.42(3.01)	6.73(2.96)	7.27(3.28)	2, 2592	14.58**	상<중<하
	거주지역 환경	10.86(3.55)	11.37(3.51)	11.84(3.60)	2, 2592	14.93**	상<중<하

*p<.05, ** p<.01

2) 소득계층과 자립준비도

각 연도별 소득계층과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계층과 자립준비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자립준비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표 IV-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서는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이들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였으며, 진로성숙도에서는 소득계층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자기통제력 수준은 상류층 청소년집단이 빈곤층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존감 역시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자기신뢰도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2차년도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전교등수와 자존감, 자기신뢰도 정도는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빈곤층 청소년들은 중류층 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낮았고, 상류층 청소년에 비해서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의 결과 역시 앞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교등수를 보면 빈곤층 청소년들은 상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았고 진로성숙도는 상류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자기통제력, 자존감, 자기신뢰도의 정도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4차년도에서는 상류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우수하였지만 진로성숙도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통제 정도는 상류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고 자존감의 수준은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자기신뢰도의 정도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에서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상류층과 중류층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통제력 수준은 소득계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존감과 자기신뢰 정도는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당해년도의 빈곤경험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영역에서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립 수준이 낮게 나왔다는 점은 빈곤

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이나 자존감, 자기신뢰도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상류 및 중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그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6〉 소득계층별 자립준비도 평균(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연도	변인	소득계층별평균(표준편차)			ANOVA		
		상	중	하	df	F	sheffé*
1차	전교등수비율	33.88(25.39)	41.21(26.81)	52.38(26.77)	2,2857	88.77**	상>중>하
	진로성숙도	15.65(4.68)	15.48(4.48)	15.39(4.98)	2,3238	.67**	-
	자기통제력	20.26(4.18)	19.96(3.90)	19.64(4.08)	2,3237	4.85**	상>하
	자존감	19.38(3.77)	19.03(3.70)	18.15(3.68)	2,3238	12.71**	상>중>하
	자기신뢰도	10.63(2.21)	10.45(2.17)	9.94(2.25)	2,3237	21.38**	상,중>하
2차	전교등수비율	31.38(24.62)	39.60(26.28)	48.60(26.70)	2,2493	63.12**	상>중>하
	진로성숙도	15.76(4.89)	16.15(4.83)	15.62(5.21)	2,2967	3.19**	중>하
	자기통제력	20.01(4.09)	19.86(4.14)	19.58(3.86)	2,2966	1.98**	상>하
	자존감	20.14(3.75)	19.60(3.75)	19.07(3.69)	2,2967	14.01**	상>중>하
	자기신뢰도	10.64(2.19)	10.40(2.22)	10.08(2.20)	2,2964	11.16**	상>중>하
3차	전교등수비율	33.33(24.11)	37.52(24.94)	39.96(25.57)	2,2048	8.87**	상>하
	진로성숙도	15.41(4.74)	15.95(4.71)	16.22(4.84)	2,2997	5.62**	상>중,하
	자기통제력	20.26(4.23)	20.15(3.98)	19.67(3.79)	2,2991	3.60**	상,중>하
	자존감	20.21(3.39)	19.93(3.58)	19.37(3.57)	2,2995	8.58**	상,중>하
	자기신뢰도	10.75(2.68)	10.58(2.09)	10.22(2.20)	2,2996	10.11**	상,중>하
4차	전교등수비율	34.52(24.07)	39.80(23.78)	41.38(24.25)	2,2164	13.62**	상>중,하
	진로성숙도	16.03(4.99)	16.16(4.99)	16.19(4.80)	2,2971	.24**	-
	자기통제력	20.40(4.00)	20.02(3.92)	19.82(3.71)	2,2971	4.29**	상>중,하
	자존감	20.45(3.62)	19.94(3.71)	19.35(3.57)	2,2971	14.50**	상>중>하
	자기신뢰도	10.85(2.03)	10.73(2.05)	10.21(2.19)	2,2971	15.56**	상,중>하
5차	전교등수비율	35.44(23.97)	38.24(24.89)	38.78(24.97)	2,1768	3.14**	상,중>하
	진로성숙도	15.10(5.31)	15.62(5.23)	15.48(5.18)	2,2592	2.43**	상>중
	자기통제력	20.15(4.01)	20.14(3.90)	19.87(3.95)	2,2592	1.16**	-
	자존감	20.99(3.65)	20.48(3.65)	19.96(3.76)	2,2592	15.23**	상>중>하
	자기신뢰도	11.21(2.09)	10.97(2.08)	10.70(2.14)	2,2592	11.65**	상>중>하

3) 소득계층과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소득계층은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 뿐 아니라 자립준비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더라도 소득계층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공변량 분석의 대안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정환경과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였을 때 나타나는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였을 때, 소득계층에 의한 효과는 전반적으로 약화됨을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 분석결과를 <표 IV-6>의 변량분석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년도의 결과에서 가정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6>참조), 진로성숙도를 제외한 학업성적(전교등수 비율), 자기통제력, 자존감, 자기 신뢰도 변인에서 소득계층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환경을 통제한 후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7>), 학업성적과 자기신뢰도 정도에서는 가정환경을 통제하고도 소득계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존감의 경우는 상류층과 빈곤층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성숙도, 자기통제력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존감과 자기 통제의 경우에서 보인 차이가 소득계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환경, 즉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그리고 가정폭력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나타낸다.

2차년도의 결과에서 가정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 모든 변수에서 빈곤층은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환경을 통제한 후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7>), 학업성적에서만 소득계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성숙도에서는 빈곤층과 중류층간의 차이만이, 자존감과 자기 신뢰도에서는 빈곤층과 상류층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통제력의 정도에서는 소득계층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차년도 결과에서 가정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6 참조>), 모든 변수에서 빈곤층은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환경을 통제한 후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7>), 자기 신뢰 정도에서는 소득계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적과 자존감에서는 빈곤층과 상류층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의 정도에서는 소득계층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차년도 결과에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6 참조>), 진로성숙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빈곤층은 중류층 또는 상류층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한 후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7>), 자기 신뢰 정도에서만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고도 소득계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 및 자존감의 정도에서는 빈곤층과 상류층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의 정도에서는 소득계층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차년도 결과에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6 참조>), 자기통제 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빈곤층은 중류층 또는 상류층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한 후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보면(<표 IV-7>), 자존감과 자기 신뢰 정도에서는 가정환경을 통제하고도 빈곤층과 상류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적과 진로성숙도, 자기통제의 정도에서는 소득계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자기신뢰도를 살펴보면,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도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2차년도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서 빈곤층은 중류층과 상류층에 비해 자기신뢰도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2차년도에서는 상류층에 비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빈곤이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결과표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빈곤층을 기준으로 하여 중류층과 상류층의 비표준화 계수가 각각 .072와 .113이던 것이 가정환경을 통제한 이후에는 .042와 .075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 및 감독, 그리고 가정 내 폭력의 정도와 같은 가정환경과 거주지역 환경의 효과가 자기신뢰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했을 경우 자기통제의 정도는 모든 연도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5차년도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상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 및 감독, 그리고 가정 내 폭력의 정도와 같은 가정환경 뿐 아니라 거주지역 환경의 열악함 정도 역시 자기통제력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통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가정폭력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감독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정도가 높고 특히 가정폭력이 없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 환경이 분석에 포함된 4차, 5차년도에서 거주지역 환경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면, 4차년도에서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제일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5차년도에서는 가정 폭력 다음으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보면,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1차년도와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소득계층 간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했을 때 2차

년도에서 중류층의 진로성숙도가 빈곤층의 진로성숙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자기통제력과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애착과 감독, 그리고 가정 내 폭력의 정도가 자기통제력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연도에서 가정 내 폭력으로 나타났고 부모 애착은 1, 2차년도와 5차년도에, 부모감독은 3차년도와 4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 애착과 감독의 정도가 높고 특히 가정 내 폭력이 없을수록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 환경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존감과 관련하여 보면,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연도에서 빈곤층의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상류층 또는 중류층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환경을 통제한 1~3차년도 사이에는 중류층과 빈곤층간에 자존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상류층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정환경과 거주지역 환경을 모두 통제한 4~5차년도에서도 중류층과 빈곤층 간에 자존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상류층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의 통제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애착과 감독, 그리고 가정 내 폭력의 정도와 같은 가정환경과 거주지역 환경이 자기통제력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모든 연도에서 부모애착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감독은 5차년도의 결과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그 효과의 상대적 크기도 소득계층의 효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고 가정 내 폭력이 없을수록, 그리고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거주지

역 환경이 분석에 포함된 4차, 5차년도에서 거주지역 환경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면, 4차년도에서는 부모애착과 함께 제일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5차년도에서는 부모애착 다음으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기신뢰도나 자기통제력에서 나타난 경향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보면,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연도에서 빈곤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이 상류층 또는 중류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했을 때 2차년도까지는 소득계층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3, 4차 년도에는 빈곤층과 상류층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차년도에는 소득계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해석에 유의할 점은 3차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시기로 청소년들이 계열별(인문계와 전문계)로 진학을 하였고 중학교 시기의 성적이 계열별 진학에 영향을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열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소득계층 효과가 중학교 시기의 소득계층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적에서 계열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학교 시기인 1, 2차년도에서는 부모감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차년도 이후에는 부모애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 내 폭력의 경우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적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의 다른 변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빈곤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 애착과 감독의 정도가 높고 가정 내 폭력이 없을수록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 환경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소득계층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의 영향보다는 부모-자녀 관계나 가정폭력 등 가정환경의 열악함과 거주지역 환경의 열악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빈곤한 가정의 경우, 앞서 소득계층과 가정환경 간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즉, 빈곤한 가정일수록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수준이 낮고, 가정 내 폭력의 정도는 높고 거주지역의 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취약한 것은 빈곤과 더불어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 내 폭력적인 환경과 주변 거주지역의 환경의 열악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내 열악한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들의 자립준비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처한 가정환경과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7〉 가정환경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한 후 소득계층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연도	변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자기통제력	자존감	자기신뢰도
1차	부모애착	-.583 (-.101)**	-.049 (-.049)**	.083 (.096)**	.163 (.203)**	.071 (.150)**
	부모감독	-1.058 (-.135)**	-.058 (-.043)**	.138 (.119)**	.116 (.108)**	.074 (.116)**
	가정폭력	.784 (.092)**	.092 (.062)**	-.231 (-.182)**	-.178 (-.150)**	-.027 (-.039)**
	소득계층(중)	-9.488 (-.174)**	.221 (.024)**	-.007 (.000)**	.227 (.030)**	.385 (.087)**
	소득계층(상) (빈곤=0)	-16.342 (-.274)**	.420 (.041)**	.222 (.025)**	.465 (.057)**	.511 (.105)**
	Adj. R ² N	.117 2853	.012 3231	.087 3230	.129 3231	.070 3230
2차	부모애착	-.421 (-.072)**	-.067 (-.062)**	.033 (.036)**	.142 (.171)**	.089 (.181)**
	부모감독	-1.159 (-.146)**	-.018 (-.013)**	.098 (.080)**	.063 (.056)**	.064 (.097)**
	가정폭력	1.107 (.143)**	.222 (.155)**	-.285 (-.240)**	-.150 (-.137)**	-.025 (-.039)**
	소득계층(중)	-7.202 (-.135)**	.736 (.075)**	.040 (.005)**	.275 (.036)**	.182 (.042)**
	소득계층(상) (빈곤=0)	-15.039 (-.249)**	.400 (.035)**	.127 (.014)**	.727 (.085)**	.381 (.075)**
	Adj. R ² N	.115 2473	.034 2944	.078 2943	.083 2944	.073 2941
3차	부모애착	-.913 (-.158)**	-.052 (-.047)**	.062 (.067)**	.173 (.207)**	.080 (.165)**
	부모감독	-.432 (-.058)**	-.087 (-.061)**	.121 (.100)**	.061 (.056)**	.068 (.107)**
	가정폭력	.182 (.020)**	.215 (.125)**	-.265 (-.182)**	-.174 (-.133)**	-.035 (-.046)**
	소득계층(중)	-1.059 (-.021)**	-.020 (-.002)**	.174 (.022)**	.248 (.034)**	.215 (.051)**
	소득계층(상) (빈곤=0)	-4.619 (-.084)**	-.460 (-.044)**	.168 (.019)**	.387 (.048)**	.309 (.066)**
	Adj. R ² N	.046 2047	.032 2991	.068 2985	.098 2989	.070 2990

연도	변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자기통제력	자존감	자기신뢰도
4차	부모애착	-.553 (-.105)**	-.007 (-.006)**	.020 (.023)**	.143 (.174)**	.070 (.152)**
	부모감독	-.431 (-.059)**	-.088 (-.058)**	.111 (.092)**	.094 (.083)**	.048 (.076)**
	가정폭력	.181 (.023)**	.310 (.190)**	-.206 (-.162)**	-.114 (-.094)**	-.042 (-.061)**
	거주지역 환경	-.227 (-.032)**	-.045 (-.030)**	-.191 (-.163)**	-.191 (-.174)**	-.065 (-.105)**
	소득계층(중)	-.902 (-.019)**	.171 (.017)**	-.035 (.004)**	.336 (.046)**	.416 (.100)**
	소득계층(상) (빈곤=0)	-5.513 (-.107)**	.168 (.016)**	.170 (.020)**	.592 (.074)**	.424 (.094)**
	Adj. R ² N	.035 2167	.043 2973	.082 2969	.123 2973	.076 2973
5차	부모애착	-.373 (-.070)**	-.109 (-.096)**	.048 (.056)**	.197 (.246)**	.090 (.198)**
	부모감독	-.451 (-.063)**	-.025 (-.016)**	.087 (.075)**	.013 (.012)**	.003 (.004)**
	가정폭력	.323 (.041)**	.247 (.145)**	-.226 (-.176)**	-.145 (-.120)**	-.056 (-.083)**
	거주지역 환경	.106 (.016)**	.043 (.029)**	-.173 (-.156)**	-.152 (-.146)**	-.048 (-.082)**
	소득계층(중)	-.140 (-.003)**	.339 (.031)**	.025 (.003)**	.293 (.039)**	.187 (.044)**
	소득계층(상) (빈곤=0)	-2.456 (-.048)**	-.020 (-.002)**	-.160 (-.019)**	.580 (.075)**	.337 (.077)**
	Adj. R ² N	.019 1771	.042 2595	.089 2595	.137 2595	.074 2595

나. 빈곤의 지속경향과 가정환경, 청소년의 자립 준비도

빈곤의 지속경향이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도와 그들이 인식하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5개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빈곤의 지속경향이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최종 측정치인 5차년도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립준비도의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종속변인으로 5차년도 측정치만을 사용한 이유는 3차년

도의 가정환경이나 진로성숙도가 4차나 5차년도의 빈곤지속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정환경이나 자립준비도가 이후의 빈곤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력에서는 빈곤지속경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다른 변수들에서는 빈곤지속경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했거나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빈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정도는 낮은 반면, 가정폭력의 정도는 높았다. 이는 앞서 연도별 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빈곤이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 및 가정내 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시빈곤과 지속빈곤 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지속될수록 가정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립 준비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전교등수가 낮았으며, 일시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자기신뢰도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는 빈곤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또한 일시적 빈곤 경험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는 비빈곤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빈곤 뿐 아니라 일시적인 빈곤 역시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및 그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V-8〉 빈곤의 지속경향에 따른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진로 준비도 변량분석표

변인		빈곤지속경향별 평균(표준편차)			ANOVA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df	F	sheffé
가정 환경	부모애착	20.08(4.33)	20.76(4.55)	21.54(4.60)	2,2101	9.65**	지속, 일시<비빈곤
	부모감독	12.99(3.50)	13.61(3.37)	14.11(3.30)	2,2101	8.61**	지속, 일시<비빈곤
	가정 폭력	7.56(3.25)	6.91(3.10)	6.48(2.99)	2,2101	8.43**	지속, 일시>비빈곤
자립 준비도	전교등수비율	46.61(26.88)	38.11(23.01)	36.13(25.46)	2,1451	5.19**	지속<일시, 비빈곤
	진로성숙도	15.47(4.92)	15.50(5.11)	15.22(5.25)	2,2101	.73**	-
	자기통제력	19.66(3.32)	20.14(3.99)	20.10(3.91)	2,2101	.60**	-
	자존감	19.92(3.24)	20.22(3.78)	20.75(3.60)	2,2101	6.22**	일시<비빈곤
	자기신뢰도	10.16(2.06)	10.88(2.07)	11.15(2.03)	2,2101	11.91**	지속<일시<비빈곤

** $p < .01$

다. 과거 빈곤 경험과 현재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

앞서 연도별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빈곤 경험은 그 당시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5 참조>). 또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빈곤의 지속적인 경험 역시 청소년들의 현재 진로성숙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8> 참조). 여기에서는 현재의 빈곤경험을 통제한 상황에서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계층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두 집단으로만 나누어 현재에서 가까운 연도의 빈곤경험 순으로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앞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 지속 경험의 효과는 자립준비도 중 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력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현재의 빈곤경험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소득계층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성숙도는 중류층과 상류층 사이

에서만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과 진로성숙도, 이 두 변인은 빈곤의 지속 경험이나 현재의 빈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학업성적(전교등수비율), 자존감, 자기신뢰도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1차년도와 5차년도 빈곤경험만이 5차년도 자립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차년도의 분석에서 나타난 학업성적에 소득계층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1차년도의 빈곤경험이 5년 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업결손에 미치는 빈곤의 효과가 장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둘째,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의 정도와 관련하여 보면, 4차년도와 5차년도와의 빈곤 경험은 자존감에, 4차년도의 빈곤 경험은 자기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 이전의 경험은 5차년도의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앞의 빈곤지속 경험 및 현재의 빈곤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빈곤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IV-9〉 과거의 빈곤 경험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빈곤여부	학업성적	자존감	자기신뢰도
5차년도	-.190 (-.003)**	.486 (.057)**	.196 (.041)**
4차년도	-.197 (-.003)**	.779 (.075)**	.451 (.077)**
3차년도	-.3351 (-.048)**	-.344 (-.034)**	-.117 (-.021)**
2차년도	.855 (.014)**	.018 (.002)**	.061 (.012)**
1차년도	-4.697 (-.081)**	.242 (.028)**	.230 (.047)**
Adj. R ² N	.007 1435	.010 2078	.045 2078

* $p < .05$ ** $p < .01$

라. 현재 빈곤층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있어서 소득계층 뿐 아니라 가정환경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차년도 현재 빈곤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환경과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변량 분석의 대안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정환경을 통제하였을 때 자립준비도에 대한 소득계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환경 변인 중 특히 부모애착과 가정 내 폭력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자립준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0>). 우선 빈곤층 청소년들의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가정환경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심리적 변인들이라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자존감, 자기신뢰도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이외에 부모와의 애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가정폭력이 부모와의 애착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변인인 반면 자존감이 나 자기신뢰도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가정폭력보다 더 큰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학업성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가정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세 가지 심리적 변인 중 두 가지, 즉 자존감과 자기신뢰도에 있어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립준비도의 각 하위 변인들에 대한 설명량(R^2)을 살펴보면 가장 큰 설명량은 보인 것은 자존감(약 11%)으로 가정환경은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 중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가정 내 폭력이 감소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빈곤층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기신뢰도, 그리고 자기통제력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빈곤층의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V-10〉 빈곤층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 준비도 간의 관계

변인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자기통제력	자존감	자기신뢰도
부모애착	-.313 (-.059)*	-.079 (-.069)*	.116 (.133)**	.197 (.237)**	.098 (.206)**
부모감독	-.370 (-.053)*	-.060 (-.040)***	-.061 (-.053)**	.011 (.010)**	.012 (.020)**
가정폭력	.735 (.096)*	.260 (.164)**	-.279 (-.231)**	-.201 (-.175)**	-.088 (-.135)**
Adj. R^2	.017	.040	.074	.107	.070
N	437	652	652	652	652

** $p < .01$

마. 소결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빈곤이 청소년들의 성인기 경제적 자립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청소년들이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 갖추게 될 경제적 자립 능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과 빈곤 간의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성인기 경제적 자립 능력 관련 변인을 경제적 자립준비도로 보고 경제적 자립준비도에는 학업성적과 진로 성숙도,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으로는 자존감, 자아통제, 자기신뢰도를 하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정의 빈곤은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 내 양육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빈곤이 가정 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 내 양육환경이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정 내 양육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애착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가정 내 폭력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빈곤층 청소년들은 주변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거주지 환경은 이들의 자립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빈곤이 거주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네 가지, 즉 (1)소득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환경과 진로준비도, (2)빈곤 지속경향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준비도, (3)과거 빈곤 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 그리고 (4)빈곤층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준비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우선 소득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환경과 진로준비도를 살펴 본 결과,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중류층이나 상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정도가 낮은 반면 가정 내 폭력은 높게 인식하여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주변 환경 역시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득계층과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에서도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뿐 아니라 자기통제나 자존감, 자기신뢰도와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상류 및 중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그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득계층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 결과,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을 통제하였을 때 소득계층에 의한 효과는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빈곤층 청소년들은 자립을 준비하는 데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의 영향보다는 부모-자녀 관계나 가정폭력 등 가정환경의 열악함과 거주지역 환경의 열악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가정 및 주변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즉, 빈곤한 가정일수록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수준이 낮고 가정 내 폭력의 정도는 높고 거주지역의 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취약한 것은 빈곤과 더불어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 내 폭력적인 환경과 주변 거주지역의 환경의 열악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 및 거주지역 내 열악한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들의 자립준비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빈곤층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동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곤의 지속경향이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도와 그들이 인식하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는 빈곤지속경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했거나 일시적인 빈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비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애착 및 부모 감독의 정도는 낮은 반면, 가정폭력의 정도는 높았다. 이는 빈곤이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 및 가정내 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빈곤과 지속빈곤 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지속될수록 가정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립 준비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았으며, 일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존감이 낮았다.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 역시 빈곤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일시적 빈곤 경험 청소년들은 비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기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빈곤 뿐 아니라 일시적인 빈곤 역시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및 그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두 집단으로만 나누어 현재의 빈곤 경험을 통제한 상황에서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학업성적과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는 1차년도의 빈곤경험만이 5차년도 자립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결손에 대한 빈곤의 효과가 장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와 관련하여 보면, 과거의 경험이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경우 자존감 및 자기신뢰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앞의 빈곤지속 경험 및 현재의 빈곤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빈곤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현재 빈곤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환경과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 변인 중 특히 부모애착과 가정 내 폭력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자립준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와는 가정폭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기통제, 자존감, 자기신뢰도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이외에 부모와의 애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가정폭력은 학업성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세 가지 심리적 변인 중 두 가지, 즉 자존감과 자기신뢰도에 있어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정 내 빈곤이 청소년들의 자립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 내 폭력이 감소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빈곤층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기신뢰도, 그리고 자아통제력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빈곤층의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빈곤층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안전망 분석 및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빈곤탈피를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대상규모 책정에서 전체 위기청소년 규모를 24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전조 109만 4천명, 위기표식 90만명, 문제행동 32만명, 위기결과 16만6천명으로 파악한 것이다. 다른 한편 ‘위기청소년’을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어 위기경험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정의하

고, 자립지원 필요와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536,705명으로 보기도 한다(아동청소년백서, 2010). 전체 위기청소년 248만명 추정은 너무 큰 규모로 추정된 수치이고, 최근의 정책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종합적, 조기투자적 정책관점에서 볼 때 자립지원 필요와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를 536,705명으로 추정한 숫자는 너무 적은 수치로 보인다. 빈곤의 세대이전 및 빈곤탈피와 관련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대상 규모는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예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이용교, 2009).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부양의 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정책대상으로 들어올 때, 최근 정책기조인 조기개입, 예방개입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취약계층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책평가 관점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교육정책, 건강정책, 복지정책 결합지향이라는 점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방과후 보육,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 방과후 학교사업을,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11〉 부처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부처	분야	추진사업	담당과
보건 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복지과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아동지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교사 사업	아동복지과
여성 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지원과
		청소년공부방	여성가족부 청소년 역량지원과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복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방과후 학교	교육정보정책국 학부모지원과 방과후 학교팀(TF팀)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있다. 사업의 개요, 추진현황, 프로그램 내용, 추진체계, 사업효과 및 현안은 다음과 같다.

〈표 IV-12〉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분야	추진사업	담당과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복지과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아동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교사 사업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사업은 민관협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We start 마을사업’을 보건복지부가 2006년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2007년 16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현재 전국 94개 센터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 13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원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스타트(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기로 한다

가) 위스타트(We Start) 사업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기 위해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복지·교육의 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할 본 사업의 대상은 0세-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이다. 부모를 변화시키는데도 비중을 두며, 지역민들이 자조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여 전개하는 사업이다.

〈표 IV-13〉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Start: We, Welfare, Education의 의미 포함 -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가급적 어린나이부터 건강, 복지, 교육의 평등한 출발점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함 -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 공동체 구축 - 빈곤아동 200-300명 정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 체육, 건강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내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 - We start 마을센터, 2009년 3월 14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실시 - 대상아동수: 0-12세 저소득 아동 300명(최대 500명)이 한동의 단위
시행주체	지역사회가 중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원
사업내용	<p>(We start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건강, 복지분야 전문인력 5-10명이 빈곤아동들에게 건강지원, 영양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보육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공부방 운영, 학교사회복지실 운영, 특기적성을 지원하는 사업 - 아동 집중사례관리: We start 센터 - 가정방문 프로그램: We start 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 - 기관방문프로그램: We start 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 - 학교연계프로그램: We start 센터 및 관내학교 - 현장 프로그램: We start 센터, 아동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 <p>(We starter 파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아동 200-300명 일집지역에 1명의 빈곤아동복지조정자(We starter)를 파견하여, 빈곤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서비스를 제공 - 2009년 3월 3곳에서 시작, 지역내 활용가능한 서비스를 찾아내어 20-30명의 핵심관리아동에게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 0세~12세까지 조기 개입적 성격으로 진행되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여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대상 양육태도교육 등 상당히 밀도있는 맞춤형 사례관리형태로 아동과 부모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사업과 차별적인 점은 1) 사업대상연령이 0-12세까지 이고,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에 집중한다

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개입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례관리, 가정방문, 기관방문, 학교연계, 문화체험현장경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차별성은 학생들의 빈곤탈피에 학업성적향상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포기해서가 아니라 학업성적향상을 위한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신뢰, 교사에 대한 신뢰감 회복으로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학업성적을 올리겠다는 매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는 의미이다. 3) 사업전개방식은 현재 아동에게 결핍된 요소를 채워주고자 건강코디네이터, 복지코디네이터, 교육코디네이터 3명이 한조가 되어 문제를 진단·파악한 뒤, 아동의 문제해결지원에 접근하는 차별성을 가진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후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으로 명명하고 국비사업으로 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94개소이며 2011년에는 전국 100개 센터를 목표로 확대되어 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은 시군구 내 저소득 아동이 300명 이상 거주하는 빈곤아동밀집지역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아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300명 및 가족과 임신부가 대상이다. 사업추진기구로는 드림스타트센터를 두고 있다. 드림아트센터는 지역사회 실태 및 아동육구 조사와 아동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조정을 하는 일을 수행한다. 4) 아동의 육구와 위기도에 따른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기초학습, 사회성 함양, 부모교육, 가족지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진 사업이다.

위스타트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경기도의 경우 우만1동, 지동, 연무동은 여전히 민관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관주도로 되면서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 생기는 마을구축사업은 위스타트사업보다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위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의 전신이자 모델이 되는 사업인만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순수 민간베이스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경우 기업후원 등 지역사회협조시스템을 공고하게 하여 지역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건강, 복지, 교육의 3가지 측면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대상층이 0~12세까지이며 가정방문, 기관방문을 통한 사례관리중심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비스제공방식도 시설에 찾아오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 모두를 찾아가는 개별가구방문 통합서비스 방식을 적용한다. 이 사업 역시 지역의 가용한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IV-14〉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세습의 고리단절을 위해 기존의 사후관리적 파편화된 개별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두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사업대상	취약지역 거주하는 0세~12세 이하 아동가구 전체와 저소득 임산부 - 아동: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부모: 양육부담 완화,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 등 지원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사업내용	모성건강, 보육·교육, 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16개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2010년 현재 94개소이며, 2011년도에는 100개 이상의 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스타트사업(We-start)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가정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의 관련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주요한 사업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시키는 등 아동과 부모에게 동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써 자립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한다. 또 부모대상의 아동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제반 양육환경 및 아동의 사기진작에 진정한 변화를 주기위한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드림스타트 사업 역시 위스타트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게 지역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양자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서로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일이 요청되고 있다. 또 동 사업의 성패 역시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보건, 건강 코디네이터들의 조정작업과 역할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자교육과 지원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디딤씨앗 통장(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 역시 어릴적부터 계좌를 만들어 빈곤탈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소정의 효과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표 Ⅳ-15〉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례관리	정기적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모니터링 등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부모교육, 건강관리,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 부모교육, 기타 학습지원 등
정서/행동	사회정서, 부모교육,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기타	후원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출처: www.dreamstart.kr

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열악한 지역에서 대학생,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섹터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던 ‘공부방’이 제도화된 것이 지역아동센터이다. 대학생, 부스러기나눔선교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찾아들어가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지도해주다가

1997년 경제위기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의 ‘열쇠아동’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4년 법제화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게 되었다. 2010년 현재 2,946개소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면에서 좋은 서비스기관이나 농어촌지역은 부재한 곳도 많아 도시와 농촌간 서비스 균형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민간이 설립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시설 신고를 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표준운영모델은 없으며 2010년 현재 1개소당 월 32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0년 총예산은 568억원이다.

〈표 IV-16〉 지역아동센터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방과후 나홀로 있는 아동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 소득계층별로 79%가 빈곤아동이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31.7%(27,698명) 차상위계층 30.7%(26,797명) 학교급식지원대상자 16.6%(14,461명) 학교급식비미지원대상자 21%(18,335)
시행주체	개인(1,322개소), 종교단체(902개소), 사회복지법인(302개소), 재단법인(180개소), 사단법인(123개소)
사업단위	각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1) 서비스대상으로 보면 미취학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 학교이탈 학생까지 포괄하고 있어, 서비스대상이 매우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가장 주된 서비스대상층이지만 자연스럽게 중학생이후 고등학생으로 연령이 확대되고 있다. 2) 프로그램으로 보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면서 지역센터 사정과 아동요구수준에 따라 돌봄기능 외에 학습지원, 정서함양, 특기활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특히 빈곤아동이 심리적 위축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최근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연구에서(이주영, 2010) 이용기간이 2년 정도 지속된 아동들의 태도변화 및 이용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자들의 이용기간이 비교적 길어 교사들이 아동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숙을 지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설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안으로는 1) 단위센터 당 지원금이 320만원인데 프로그램 진행, 인건비, 전기세 등 공과요금, 4대 보험료 등 제반지출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 지원금이 꾸준히 증액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화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2) 아동청소년 개인에게 결핍되어 있는 요소를 치유해주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치유가 요구됨에도, 평가점수 획득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3)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지역자원과 연계가 잘 되어야 하나 공식적인 연계망 구축이 부재하여 실무자 개인인맥에 의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자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사업대상이 타유사사업 대상과 중복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사교육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방과후 교육’ 활성화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 도입되었다. 처음 출발은 학교-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활용한 빈곤탈피를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사업이었지만 학업신장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 내로 사업이 옮겨옴에 따라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으로 제한·명확화되면서 교복투사업, 학교 방과후 교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사업대상자 모집을 놓고 경쟁 아닌 경쟁구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5) 그중에서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사업은 서비스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 중복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도 부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지도교사를 파견해 주는 하는 사업이다.

〈표 IV-17〉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현재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에게 보호, 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종사자(생활복지사 1~2명)와 자원봉사자 중심의 인력수급으로는 양질의 교사 확보와 다양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빈곤아동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
사업대상	전국 2,297개 지역아동센터에 2,905명 파견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사업내용	- 지원유형별: 전일형(주간, 주야), 프로그램 지원형(시간) - 교사분야(10분야): 기초학습, 아동지도, 보건위생, 야간복지,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능활동, 체육활동, 안전귀가지도, 지역사회복지사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청년실업 등 장기불경기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요청할 경우 전문교사를 파견한다. 파견하는 복지교사의 전공영역은 기초학습교사, 아동지도교사, 보건위생교사, 야간복지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능활동교사, 체육활동교사, 안전귀가지도교사, 지역사회복지사의 10개 영역으로 다양하며 전일형과 프로그램형이 있고 활동지원 시간도 주간형과 야간형이 있다.

파견하는 인력 중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요구로 파견되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아동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기관과 협력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인력이다. 이 사업이 공공일자리를 늘리기 사업이기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에 사업의 지속성이 요청된다. 아동·청소년 복지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아동과 기관을 연계해 주기 위해 점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속적인 파견과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있다. 세부사업의 개요, 추진현황, 프로그램 내용, 추진체계, 문제점 및 현안은 다음과 같다.

〈표 Ⅳ-18〉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분야	추진사업	담당과
아동청소년복지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지원과
	청소년공부방	여성가족부 청소년 역량지원과

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이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방과후 돌봄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청소년공부방지원사업, 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청소년업무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사업이었던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지역아동센터사업은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어서 방과후 돌봄사업은 이원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IV-1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 - 중앙, 지방 및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학습능력배양,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학습 지원 및 복지 보호 - 사교육비 절감, 범죄·비행노출 예방효과, 진취적 기상 함양
사업대상	- 맞벌이·한부모 부모의 실직, 파산,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시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운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상시적 운영 지원
설치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
사업내용	- 전문체험활동, 재량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년자료(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역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학습성취보다는 전문체험활동과정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빈곤탈피에 있어서 학습성취가 가지는 의미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지원을 받을 자세나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처럼 아동에게 진로를 발견하고 생활의 흥미나 활력을 발견 할 계기를 열어주게 될 사업전개는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서비스 대상아동의 연령이 4세-12세로 정해져 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습신장보다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대상, 프로그램, 운영목표면에서 유사성이 많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쪽이 서비스연령층 범위가 더 넓다는 점과 이용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서비스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1명당 이용기간을

2년정도에 맞추어서 진행한다는 점이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점이다. 대부분은 원칙대로 시행하되 2년이 지나고도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대상이 아니라 방과후아카데미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용아동의 기관이용에 따른 자신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수준이 높다고 한다. 두 기관이 대상아동 연령이나 이용기간 측면에서 약간 다른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요구 등에 의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대상아동연령층 범위도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두 기관의 운영형태가 점점 더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공부방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속부처가 바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06년 328개소, 2007년 343개소, 2008년 344개소, 2009년 355개소로 약간씩 늘어나서 2010년 현재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총 385개소가 운영중이다. 2010년의 경우 학습지원중심의 가형이 244개소(63.4%)로 특기지도 등 문화체험 중심의 나형이 98(25.4%)개소, 지자체의 재량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타가 43개소(로 11.2%)로 절반이상의 센터에서 학습지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Ⅳ-20〉 청소년 공부방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
사업대상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50%:50%) (시도 직영, 위탁인 경우 시도가 지방비 부담, 기초지자체가 건립, 운영하는 경우 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부담)
사업내용	- 가형: 학습공간만 제공하는 시설 유형 - 나형: 학습공간제공외 학습지원프로그램도 제공 - 기타: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그러나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2011년부터는 청소년 공부방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100%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지방과는 다른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은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지방비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방침이 바뀔에 따라 2011년부터는 중앙에서 권장하는 방향인 지역아동센터사업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V-21〉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분야	추진사업	담당과	비고
교육복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지자체
교육정보	방과후 학교	교육정보정책국 학부모지원과 방과후학교팀(TF팀)	지자체

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을 지역의 문제로 보면서 1)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가정의 기능만큼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절히 분담을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2) 지역사회를 교육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3) 나아가 지역사회가 가정의 고유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인식하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취약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을 통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학교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보건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제공을 통해 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아동청소년백서, 2009).

〈표 Ⅳ-2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1990년대 중반이후 소득불평등 심화로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은 확대되고, 소득과 학력에 따라 같은 지역내에서도 특정학교에 취약계층이 밀집하는 학교별 계층분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는데 있음.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교육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취약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지원망을 구축
사업대상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
시행주체	- 사업추진체계: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교육복지위원회) - 사업지원체계: 사업지원협의회(중앙 지원협의회, 광역 지원협의회), 연구 지원센터(중앙연구지원센터, 시도 연구지원센터)
설치시설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1) 교육취약집단을 학교내외에서 발굴하고 2)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강조한다는 점과 3) 이를 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에 프로젝트 조정자를 배치하며 동시에 학교단위에도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학습능력증진, 문화체험활동 지원, 심리·정서발달 지원, 교사와 학부모 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하다.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를 위해 사전에 요구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을 살펴서 이를 회복시켜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활동체험기회가 부족한 학생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램을 제공하고 정서,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정서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교복투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진 사업이다. 즉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히 연계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추진을 위해 중앙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광역 교복투 지원협의회, 중앙지원연구센터, 시도 연구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전담팀, 지역교육청에 지역사회운영협의회를 두며 교육지원청에 프로젝트조정자, 지역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협의체,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배치하고 있다.

2003-2004년 초기 사업예산은 23억이었으나 2005년 16억, 2006년 359억, 2007년 642억, 2008년 513억, 2009년 786억, 2010년 810억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고등학교도 추가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초등학교 299개교, 중학교 236개교, 고등학교는 이제 시범단계로 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할뿐 아니라 인근지역에까지 확대되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학교가 중심역할을 하되 지역주민, 지역시설, 지역기업, 지역민간단체, 지역서비스기관 등 지역역량에 따라 가능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결시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매우 포괄적인 사업이다.

나) 방과후 학교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방과후 학교’는 참가 학교 수나 참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형태는 방과후 보육시설 유형,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 유형, 교과 프로그램 유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유수강권(바우처) 제도는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기개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모든 바우처제도는 실행단계에서 낙인효과가 대한 우려가 따르는데 학교현장에서도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학기 초에 방과후 학교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를 제공하며, 아동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동들도 모르게 선 신청 - 후 지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방과후 학교 자율운영이 되면서 시도별, 학교별로 지원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층 중 일정한 지원대상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내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도입된 방과후 보충수업,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모두 통합된 것이나 최근의 방과후 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공간 안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방과후 교육은 훨씬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 소결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빈곤이 청소년들의 성인기 경제적 자립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도달하여 갖추게 될 경제적 자립능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과 빈곤과의 관계를 통계적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크게 네 가지, 즉 (1)소득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환경과 진로준비도 (2)빈곤 지속경향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진로준비도 (3)과거 빈곤 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 그리고 (4)빈곤층 청소년들

의 가정환경과 진로준비도로 나누어 보았다. 분석 결과 가정 내 빈곤이 청소년들의 자립에 어려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 내 폭력이 감소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빈곤층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기신뢰도, 그리고 자아통제력뿐 아니라 진로성숙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도 보여주었다. 가정의 빈곤과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동의 성적, 진로성숙도, 자아안정감이 중, 상위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으나 가정환경, 즉 부모의 자녀감독이나 애정이 긍정적일 경우 또 가정내 폭력이 없을 경우 아동의 성적, 진로성숙도, 자아안정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동시적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중인 사업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Ⅳ-2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안전망 관련 정책현황

추진사업	목적	대상	주체	내용
위스타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 공동체 구축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아동	지역사회 중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빈곤아동 대상의 건강지원, 영양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보육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공부방 운영, 학교사회복지실 운영, 특기적성 지원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	취약지역 거주하는 0세~12세 이하 아동가구 저소득 임산부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신체/건강관리,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역아동센터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개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	-
아동복지교사 지원	빈곤아동문제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기본 인프라 체계 구축	지역 아동 센터에 2,905명 파견	보건복지부	전일형(주간, 주야), 프로그램 지원형 교사분야(10분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 사교육비 절감	맞벌이·한부모 부모 가정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상시적 운영 지원	전문체협활동, 재량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청소년공부방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50%:50%)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원프로그램 제공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취약 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	시도 교육지원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교육복지위원회)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부처 모든 사업의 정책패러다임이 사후적 접근에서 예방적, 사전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수렴되고 있다. 특히 건강, 교육,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되어 종합적 문제해결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각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와같은 독립적인 방식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에 의해 주관기관은 설정하되, 아동·청소년 당사자,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나 지역사회의 시설종사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이나 기업체 등 지역사회 활용가능한 자원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종합적인 접근방식은 사후문제해결에서 사전예방, 사전투자방식으로서의 방식전환을 말해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전환으로 보인다.

둘째, 이전에는 설정되지 않았던 ‘지역사회’ 개념이 사업수행에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과 NGO, 기업체 모두가 지역내 아동·청소년의 빈곤극복을 위한 처방에 활용 가능한 지역가용자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추진체계로 접근한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종합적인 접근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가지는 효과에 주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주거지역이 아동의 성적, 진로성숙도, 자기안정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아동들의 학업성취나 진로성숙도, 자아안정감 등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역적 접근이라는 정책적 관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의 문제진단 및 해결에서 지역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시켜 나갈 ‘코디네이터’가 등장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조기투자적, 종합적, 포괄적인 접근방식과 아동,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시키는 나가는 접근방식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사업성패 및 사업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핵심에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기관지정 및 인력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출발선을 보정해 주기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키(Key) 역할담당자인 코디네이터(조정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코디네

이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교복투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위스타트사업들에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사업성공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

넷째, 그런데 코디네이트에 대한 법적근거부재로 이들의 역할과 열정을 이끌어낼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 활동영역을 보장해주고 이들의 열정을 끌어낼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아, 시행착오와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훈령에서조차 이들의 기능과 자격요건,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교복투 사업의 주체가 단위학교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학력신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뀔에 따라 이들의 위상과 기능은 더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즉 종합적이고 사전예방적이고 이세대모델(two-generation model)을 넘어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업으로 출발한 사업들이 출발당시의 목적을 흔들림없이 고수하게 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감초역할을 수행할 코디네이터의 위상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업대상자들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자신에게 적절한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되기 위해 지역별 조정협의모임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사업주체들이 서비스대상자 모집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배정의 조정문제뿐 아니라 사업의 중복성 문제 혹은 중복의 원인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조정역할을 수행할 중심이 없다는 것은 사업대상자와 아동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경향, 또 아동들의 중복서비스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 내에 조정역할을 수행해 줄 중심협의체의 존재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53
2. 정책제언	159

1. 요약

가.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과 사회적 안전망

1)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

이상과 같이 소득계층별 부부관계성의 분석을 통해 본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부부관계성 실태과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유무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2008년도는 2007년에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남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모두 소득계층별 부부동반활동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동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 가정폭력 경험 유무의 차이를 본 결과, 2007년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08년의 경우에는 중산층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저소득층에 비해 매우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의 부부관계성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의 취업형태별로는 부부가 모두 무직인 경우에 비해 남편만 일자리가 있거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의 부부관계성이 긍정적인 반면, 여성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부부의 동반활동이 잦을수록 부부관계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이 전무한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집단의 여성들의 부부관계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부부의 취업상태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차년도 모두 남편만 취업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집단, 부부모두 일자리가 없는 집단, 여성만 취업한 집단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저소득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여성의 주관적인 결혼만족도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비전문직이면서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부부갈등 문제 중 기혼유배우자 여성들이 선정한 부부갈등 원인의 1순위는 경제적 문제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이 갈등 원인의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과반수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부부갈등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집단에서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전체 35.9%)보다 1.5배나 심각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갈등 1순위는 남편만 취업한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부부갈등 1순위는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만 취업한 집단에서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의 비중은 전체 비율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여성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며, 이는 남성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 취업을 하고 남편의 실직인 경우 부부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실을 감안해 보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이 사회의 경제구조가 여성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취약계층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남편과의 부부동반 활동도 자주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에의 경험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2) 취약계층 여성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첫째, 정책대상으로서 ‘가족’개념의 모호성과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취약계층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 개별대상으로서 우선 분류된 이후 그 개별대상의 가족으로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상당수이다. 장애인가족,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빈곤가족 등 단위사업을 중심에 두고 ‘가족’을 부수

적으로 엮는 형식이었다.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족’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경우 가정폭력이라는 극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와 동반아동’을 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가해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상당수이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모호하다.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정책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은 가정폭력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책대상이 명확하나, 가정폭력이 기존 아내폭력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 노인학대, 아내학대 등을 포괄하는 안전망으로서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약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해서 보편적 포괄로 보기 어렵다.

둘째, 부처의 이원화로 전달체계가 분절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을 포함하여 그 외에 가족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사업 대부분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안전망으로서의 이들 정책을 관리·규제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 부처로 나뉘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유기체로서의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대응하는데 있어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은 노동, 문화, 보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 이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여 중복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셋째, 보편적 서비스로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는 관련법 제정 이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개소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민간 차원의 서비스들은 안정적으로 물적 자원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보강, 체계화된 서비스들이 공적 차원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소수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수 십명을 기다려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취약계층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접근성 문제는 단지 시설 개소수 규모 그 자체의 영역을 넘어 지역별 시설 설치가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한다. 시설의 지역적 편중 분포의 문제는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관련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면서 생긴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시설별·대상별 서비스의 편차까지도 일으킨다(변화순 외, 2009). 가정폭력과 같은 긴급 욕구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나.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1)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

첫째, 소득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환경과 진로준비도를 살펴 본 결과,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중류층이나 상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애착 및 감독의 정도가 낮은 반면 가정 내 폭력은 높게 인식하여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주변 환경 역시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득계층과 자립준비도 간의 관계에서도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뿐 아니라 자기통제나 자존감, 자기신뢰 같이 심리적 측면에서도 상류 및 중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그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빈곤층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빈곤의 지속경향이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도와 그들이 인식하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했거나 일시

적인 빈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비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애착 및 부모 감독의 정도는 낮았다. 가정폭력의 정도는 높았다. 이는 빈곤이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 및 가정내 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립준비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았으며, 일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존감이 낮았다.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자기신뢰도 역시 빈곤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일시적 빈곤 경험 청소년들은 비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기신뢰도를 보였다.

넷째, 소득계층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두 집단으로만 나누어 현재의 빈곤 경험을 통제된 상황에서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적과 자존감 및 자기신뢰 정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및 자기신뢰의 정도와 관련하여 보면, 빈곤에서 탈피할 경우 자존감 및 자기신뢰의 정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정폭력은 학업성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세 가지 심리적 변인 중 두 가지, 즉 자존감과 자신 신뢰에 있어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정 내 빈곤이 청소년들의 자립에 어려움이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 내 폭력이 감소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빈곤층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기신뢰도, 그리고 자아통제력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빈곤층의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 및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중인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모든 사업의 정책패러다임이 사전적, 종합적 접근으로 변화·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예전에는 대상사업이 특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면, 현재는 주관기관은 설정하되 민간복지시설이나 기업체 등 지역사회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추진체계로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또 사후문제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적 접근 즉 ‘조기투자’개념에 입각하여 입안되는 사업이 많다. 또 표면으로 나타난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과 NGO, 기업체 모두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빈곤극복을 위한 처방에 활용 가능한 지역가용자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추진체계 확립 즉 ‘지역연대의 힘’을 끌어내고 활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패러다임 전환은 사업내부에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가정, 학교와 기업체, 학교와 민간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등 다방면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연계를 이끌어낼 ‘코디네이터’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사업 중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위스타트사업들은 빈곤탈피를 위한 아동·청소년 지역공동체구축이 목표인 사업이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훈령에서조차 이들의 기능과 자격요건,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형편이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사업의 주체가 단위학교로 되고 학력신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뀔에 따라 이들의 위상과 기능은 더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즉 종합적이고, 사전 예방적이고, 이세대 모델을 넘어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업으로 출발한 사업들이 출발당시의 목적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감초 역할을 수행할 코디네이터의 위상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셋째, 사업대상자들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자신에게 적절한 서비스기관으로 연결되기 위해 지역별 조정협의모임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사업주체들이 서비스대상자 모집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배정의 조정문제뿐 아니라 사업의 중복성 문제 혹은 중복의 원인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일정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이 수렴해 가고 대상들도 중복되는 문제가 부문마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정역할을 수행할 중심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정책제언

가. 취약계층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정책제언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정책이 취약계층의 가족 및 가족관계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위 ‘저소득층 중 문제 있는 가정’은 정상가족에 대응한 비정상가족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가족 변화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 ‘유기체로서의 가족’ 역시 구체적으로 개념정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 정의 작업은 구체화하되, 체계를 나누어 각 정책사업의 수준으로 재정리되어야 하겠다.

둘째,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접근성 확대와 관련하여 이용자 수, 교통, 시설유형 등을 고려해 적정 개소

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수행체계로서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개소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 수십명의 인원이 대기자 리스트에 올려지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도 상당수가 도시에 몰려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족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이며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의 격차의 문제도 심각하다.

셋째,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에도 민간자원과의 연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급체계의 중심인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협의체 구성하는 단순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지역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넷째, 가족관계에 있어 위험과 실질적인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보인다.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유형에 따른 분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 내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예방교육과 더불어 가족활동, 가족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망 등의 다차원적인 욕구조사가 실시되어 프로그램 개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빈곤의 세대이전 및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첫째, 신빈곤층의 대두로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빈곤의 세대이전 및 빈곤탈피와 관련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대상 규모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차상위계층의 아

동·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신빈곤층이 부상하면서 이 계층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종합적 접근을 위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이 단위시설중심적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에서 사전예방적, 사전투자적, 지역유대의 힘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모두 이처럼 교육-복지-건강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에 목표를 두고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출발당시의 잘 정립되어 있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학교-지역사회공동체 연계사업이라는 사업출발당시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의 최근 사업단위가 단위학교로 축소되고 사업목표가 학력신장으로 가고 서비스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국한되고 지원방식도 서비스 수급대상자만을 모집하여 학습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환원되는 것이기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원래 목적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 ②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사업조정인력인 코디네이트의 위상, 기능, 자격요건, 처우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 규정 필요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트의 위상과 처우가 매우 관건인 사업이다.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코디네이트 인력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반드시 명기가 되어야 하며, 지역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맞는 처우를 제시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③ 이 세대(Two generation) +지역사회 참가모델 구축을 위해 각 사업에 핵심적으로 요청되는 인력인 코디네이터 요원 배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현재의 복지지도교사파견사업은 개별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줄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아동을 이들 기관이나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인력은 장기불황기에 여성일자리 창출효과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사업전개가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므로 지원교사 파견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조기개입적, 예방적, 종합적 접근을 위해 아동의 부모와 의사소통채널 확보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애정, 가정내 폭력이 학업성취, 진로준비도, 자아안정감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가정내 폭력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가정환경변화를 위해 부모와 의사소통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유사사업 통합 기능조정 위해 부처별 유사사업을 1개 부처로 통합 운영한다.

현재 방과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약간씩 중복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운영으로 볼 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과 지역아동센터는 가장 중복문제가 논의되는 사업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하여 중복서비스 문제나 아동모집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소속부처에 따라 지원금액, 평가내용과 평가방식이 다르고 동일한 서비스대상을 두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안에 대해 1개 부처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고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재의 지원예산액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중단과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집행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지만, 예산의 30%를 반드시 프로그램비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중간한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적은 예산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개별아동의 특정요구들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성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연계들을 어느 정도 발굴하여 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 및 현실화에 적합할 것으로 사려된다. 평가항목에서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인적자원의 풀을 발굴하고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지 여부를 측정하는 관점의 설정이 요청된다.

다섯째, 지역단위별 ‘지역아동청소년사업협의체’ 혹은 ‘지역아동청소년정보센터’ 기구 마련

각 사업의 주체는 다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지역사회의 시설, 인적자원 등 지역가용자원 발굴과 연계를 수행할 코디네이터들이 중요함은 위에서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취약계층 아동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 전체를 조정할수 있는, 기관코디네이터, 가칭 지역아동청소년사업협의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수행기관 중 사업이 활성화된 중심기관 1개를 설정하여 이 기관이 지역별 중심 조정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을 지향할수록 연관된 여러 기관에게 자원을 배분

하고 조정할 협의체 구성이 요청된다.

여섯째, 세부사업별 코디네이터 인력의 위상정립과 처우의 현실화

교육격차라고 하면 의례 도농격차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지역격차가 소득계층 격차와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지역이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나와 교복투 사업이나 드림스타트사업과 같은 지역사회를 파트너로 설정한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가 파트너로 연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학교측에 많아서 야기되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여진다. 지역자원발굴뿐 아니라 이 둘간의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능에 걸맞는 위상과 처우의 현실화로,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지역일꾼으로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토대가 없는 인물로 채워져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면서도 애초 설정한 목적달성이 되지 않아 향후 이들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나 평가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영호 · 윤성철 · 황인하 · 이무송 · 이상일 · 조민우 · 이민정 (2005). “경제위기에 따른 사망률 불평등의 변화: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활용”. 『예방의학회지』 38(3): 359-365.
- 강신욱 외 (2010), 『고용 · 복지 · 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고정자 (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고희숙 (2002). 부부관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김경혜 (2009). “경제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 : 정책대상과 정책방향”. 『서울도시연구』 10(3): 23-36.
- 김광일 · 고복자 (1987). “아동 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8: 66-81.
- 김광혁 (2006).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4): 265-289.
- 김광혁 (2010). “아동 ·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아동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35-65.
- 김교성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 김상균 (2005). “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와 전망”. 『한국사회복지교육』 1(2): 1-13.
- 김인숙 (2005). “여성가족부 신설과 가족복지의 관점 및 방향”. 『사회복지리뷰』 10: 5-30.
- 김연옥 (2001). “실직가정의 가정해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9-33.
- 김위정 · 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41(6).
- 김재엽 (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 김문길 · 우선희 · 박은영 (2009).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삼 (2009).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KDI정책포럼, 제220호.

- 나은숙·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 노혜련 (2000). “실직자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료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 155-183.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200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민주노총 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연대 (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2 자료집(2009.3.27):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연대.
- 박미금 (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2(1): 1-17.
- 박민자 (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제21권.
- 박영란 외 (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현선·정익중·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박혜신 (2003). 『빈곤가족의 빈곤문화: 빈곤가족의 가족사와 빈곤가정아동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변종임·조순옥·최종철·박현정·김인숙 (2009). 『2009년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변화순 (1988).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고찰”. 『한국인구학회지』 10(2).
- 변화순 외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이미정·박복순. (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여성부.
- 신광영 (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38(1): 25-50.
- 신수련 (1993). 『부부관계와 부부의사소통 및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 보건복지부.
- _____ (2009). 『아동·청소년 백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지원단.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미경 (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자기능,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64-73
- 심원영 (2010). “다족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ARCL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101:67-79.
- 여유진 · 김수정 · 구인회 · 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 김태완 · 김수정 · 송치호 (2010). “경제위기 전후의 여성 빈곤 및 생활실태”『제1차 포럼원고』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발행)
- 여진주 (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여성가족부 (2010),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이경림 (2006).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미숙 (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1968~1990.6까지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 83-102
- 이병희 (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평가』, KDI 연구보고서.
-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이운경 ·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시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pp43-59
- 이원규 · 김재일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한국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한국사회정책』 14:213-255.
- 이정미 · 김정옥 (2006).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

-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학지』 11(1): 103-132.
- 이주영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진희 (2007). 「가족내 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미발간논문.
- 이혜숙·임은하 (2009). “빈곤가정의 빈곤화 과정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8): 255-294.
- 장지연 (2010).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이동성」, 2010년 비판사회학대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장혜경·김영란 (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홍승아·김영란 (2008). 『아동케어 실태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화정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4(2): 125-138.
- 전지원 (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 정재훈·송다영·강창현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조현순·정은 (2008). “가족정책의 효율적 전달체계운동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 비교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3): 63-99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조혜자·방희정 (1998).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15.
- 최창욱·송병국·김혁진(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경옥 (2004).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경제복지 및 삶 만족”.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441-451.
- 현대경제연구원 (2010).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홍윤정 (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정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덕순 (2001). “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2:31-59. 한국노동연구원.
- 황성훈 · 유희정 · 한오수 (1999). “IMF에 관련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61-172.
- 황영희 (1984). 『부모 의 결혼만족도 와 아동학대 와의 관계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Ahnquist J, Fredlund P, Wamala S P (2005). Is cumulative exposure to economic hardships more hazardous to women's health than men's? A 16-year follow-up study of the Swedish Survey of Living Condition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61, pp.331-336.
- Annie E, Casey Foundation (2010). *Kids Count Data Book*. Baltimore: Annie E. Casey Foundation.
- Astone, N. M. and S. S. MaLanahan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6, pp.309-320.
- Becker, G. and N. Tom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4 Issue 3, pp.1-39
- Bell, D(1990). Poverty and wom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Vol.45 Issue 3, pp.385-389.
- Blood, Robert O. and Wolfe, Donald M. (1960). *Husbands &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Greenwood Press. Collier-Macmillan, United States.
- Boise, L., Heagerty, B., & Eskenazi, L. (1996). Facing chronic illness : The family support model and its benefit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27 Issue 1, pp.75-84.
- Briere, John N. (1992). *Child abuse trauma: theory and treatment of the lasting effects*. Sage Publications, INC., 2455 Teller Road, Newbury Park, CA.
- Burr, Wesley R. and Constantine, Larry L. (1987). Family Paradigms: The Practice of Theory in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9, No. 4, p. 948
- Calvert, Anita June (1986). *The effect of family enviornment factor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The University of Texas

- Health Sciences Center at Houston School of Public Health. USA.
- Casper, Linne M. , S. S. McLanahan, and I. Garfinkel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Issue 4, pp. 594-605.
- Cerezo, M. Angeles and Frias, Dolores (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Nov94*, Vol. 18 Issue 11, pp.923-932.
- Chicago Foundation for Women (2009). "Women's Economic Security Collaborative: The Stimulus Package - Through a Gender Lens," Tuesday Blast: Chicago Foundation for Women's Weekly eUpdate.
<http://www.cfw.org/page.aspx?pid=980> accessed November 8, 2010.
- Coleman, J.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95-120.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verman, Shelley (1986). Occupational segmentation and sex differences in earning.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 Mobility*, Vol. 5, pp.139-172.
- Daly, Mary and Katherine Rake (2003). *Gender and the welfare state: care, work and welfare in Europe and the USA*. Cambridge, United Kingdom: Polity Press.
- Davis, R. C. (1987).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roject: A Proactive Response to Familial Abuse. *United States Police Chief August*, Vol. 54 Issue 8, pp.42-44.
- Deutsch, Milton Arnold (1980). *Who abuse and who does not: A social competence model of child abuse*.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USA.
- Dibble, Ursula and Straus, Murray A. (198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No. 1, pp. 71-80.
- Eastman, D. (1958). Acceptance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2, pp 95-99.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09).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il, David G. (1971). A Sociocultural Perspective On Physical Child Abuse. *Child*

- Welfare Jul 71, Vol. 50 Issue 7, p389-395.*
- Giles, Sims(1983). *Wife Battering: A Systems Theory Approach*. Guilford Press, New York.
- Hartman, Heidi (2009). "*Gender Implication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an address presented at an event co-sponsored by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of North America, the Center of Concern, and the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on April 22, 2009, and reported by Heinrich Böll Foundation of North America.
- Haveman , R. and Wolfe, B. (1995).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 A Review of Methods ab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3 Issue 4, pp.1829-1878.*
- Hawkins, James L. (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0, No. 4, pp. 647-650.*
- Herrnstein, R and C. Murray (1994). *The Bell Curve: Intelligence and Class Structure in American Life*. New York: Free Press.
- Hobsbawm, E. J.(1974). Labor history and ideology.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7 No. 4. pp.371-381.*
- Ishii-Kuntz, Masako and Coltrane, Scott (1992). Predicting the sharing of household labor: Are parenting and housework distinct?. *Sociological Perspectives Winter92, Vol. 35 Issue 4, pp.629-647.*
- Kempe, Ruth S. and Kempe, C. Henry (1987). *Child Abuse*. Harvard University Press; 79 Garden Street; Cambridge; MA; 02138
- Korbin, J. E (1981). '*Very Few Cases*':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CA.
- Lennon, Mary Clare and Rosenfield, Sarah (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he importance of op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0 No. 2, p.506.*
- Lewis, O. (1968) *La Vida: A Puerto Rican Family: in the Culture of Poverty*: Sun Juan and New York. Lomdon: Panther Press.
- Lloyd, Sally A. and Emery, Beth C (1998). *Discourse of romance & violence*. Women Studies, Miami University, Oxford, USA.
- Mace, D. R. & Mace, V, C. 1976). *Marriage Enrichmenr: A Preventive Group*

*Approach for Couples. In D. H. Olson(ED), Treating Relationship. Lake Mills
Iowa: Graphic Publishing Company.*

Mattson, D. C. (1988). *The effectiveness of specific marital enrichment program:*
Time,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Dakota San Francisco.

Nye, F. Ivan (1961). Maternal Employment and Marital Interaction: Some Contingent
Conditions. *Social Forces, Vol. 40, No. 2*, pp. 113-119.

Rowntree, Seebohm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Macmillian and Co.

Stets, J.E., Straus, M.A., and Gelles, R. J. (1990). *Gender differences in reporting
marital violence & its consequences*.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Sussman, Marvin B., Steinmetz, Suzanne K., Perterson, Gary W. (1999). *Handbook of
Marriage & the Family*,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Ulbrich, Patricia and Huber, Joan (1981).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3, No. 3*, pp. 623-631.

Whipple, Ellen Elizabeth (1989).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abusive
families*.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Wilkie, Jane Riblett, Ferree, Myra Marx, and Ratcliff, Kathryn Strother (1998).
Gender and Fairness: Marital Satisfaction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0, No. 3*, pp. 577-594.

Yegidis, Bonnie L. (1992). Family violence: Contemporary research findings and
practice issu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28 No. 6*, p.519.

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2.jsp

www.dreamstart.kr

www.kostat.go.kr

Abstract

A study on countermeasures, evaluation of social safety net, and change of the poor after economic crisis: A gender perspective on Human New Deal Policy (Agenda on Family / Culture)

Wha-Soon Byun
In-Soon Kim
Soo-Yeon Jung
Hey-Jeong Baeck
So-Hyun Kim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families in terms of marital relationship, as well as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familial and cultural capital during the second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income-class, employment status of husbands and wives, housework sharing

satisfaction, outdoor recreation activities, and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this research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data. Also, this study scrutinized adolescents' familial environment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The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variable to show the capacity to escape from hereditary pover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younger married-women and ones' husbands with lower education backgrounds tend to have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In terms of income-class, the married women of low-income class have relatively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ones' of high-income class. Additionally, women-householders have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compared to husband-householders or dual-earner couples. This outcome elucidates negative effects of the women's double-burdens to marital relationship, housework burden and economical burden. Moreover,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have fatal influences on the marital relationship. Besides the negative factors that contribute to worsening marital relationship, this research also presents findings that housework sharing and outdoor recreation activities with husband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ositive marital relationship.

Also, from the test for the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e found that youths from low-income families have low level of parental attachment, have lack of parental monitoring, and are more frequently exposed of family violence and vulnerable community environment. These negative familial and communal

environment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t means that both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relationship are essential to enhance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which in turn can be a protective factor to cut off hereditary poverty.

From this quantitative research, we subsequently propose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reinforce positive marital and parental relationship to effectively prevent or mitigate the hereditary poverty. In macro-perspectives,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provided to stabilize life-environment for vulnerable low-income women and families. The current social welfare mechanism needs to be changed from the ex-post intervention to the preventative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benefit of social welfare services needs to be provided for more universal subjects. On top of that, the related community institutes need to have closer cooperation line and a networking system to provid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ervices for adolescents from vulnerable low-income famili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8-02
2010 연구보고서-11-1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가족·문화부문)

2010년 12월 28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375-2 94330

978-89-8491-373-8 94330 (세트)

<정가 10,500원>